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공공기관 협업(Collaboration), 왜 필요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원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도입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협업우수사례집을 발간한 지 어느덧 3년째를 맞았다.

2013년 6월, 정부는 행정부문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처 간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공유, 소통·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포하고 공공부문에 협업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다음달인 2013년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칸막이를 제거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수익창출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민간분야와 달리 공익 추구아래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공공기관들이 서로 융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처음 도입했던 해에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단순협조와 정보제공, 시스템 공동구축 등에 불과한 과제가 많았다.

다행히 해가 거듭될수록 공공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인 과제발굴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협업기관 참여로 이루어진 난이도 있는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협업분야도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의료, 관광, 공연, 교통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협업과제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협업이 지니고 있는 힘, 상생과 시너지 효과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개별 기관의 전문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호협력을 통한 협업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행정비용 절감, 공공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동반하였다. 그 좋은 사례가 동서발전의 협업과제 ‘석탄재를 재활용한 건축자재 기술개발’이다. 동서발전은 산·학·공과의 협업으로 매년 25억원의 매립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매출액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국민들은 고품질 저가의 건축자재 공급으로 시공비용 절감(30%)과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6db)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다. 최근 급속히 발달한 스마트기기에 익숙해진 국민은 더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하는 불편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토털케어 를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시스템’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서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들이 매년 어린이집에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었고 수자원공사는 기술개발 지원에서부터 해외동반 진출까지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2배로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영향이다. 기존 구성원의 현지 적응, 신규 채용환경의 변화, 지자체 및 혁신클러스트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협업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현안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문제 해결과정에 동일지역이전기관, 지자체,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 등 새로운 협업 파트너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과제를 우선 발굴하도록 유도하였다. 석유공사는 울산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석유기관의 협업플랫폼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R&D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위에 언급한 협업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통해 지금까지 경영혁신,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회문제해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이 협업에 소극적이고, 단순협조, 정보제공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협업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만 한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협업콘텐츠를 발굴한다면 기관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협업을 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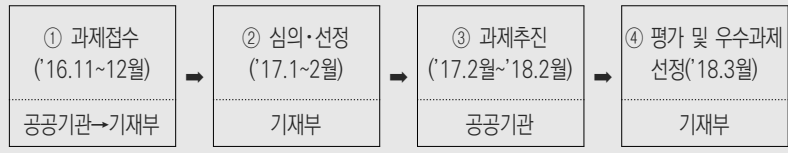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IT 전문가 돈 탭스콧(Don Tapscott, 캐나다)의 이 한마디가 협업의 필요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Collaborate or perish(협업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과제

1. 과제접수기간 : 2016.11.1.(화) ~ 12.30.(금)
2. 대상기관 : 323개 공공기관
3. 상담문의 : junga1@korea.kr

*협업과제 운영절차



CONTENTS

01. 고속도로 EX-허브 (대중교통 환승시설) 추진 한국도로공사	7
02. 산학공 협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한국동서발전	17
03.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25
04. 산학연관 2인3각 물 산업 한류를 꿈꾸다 한국수자원공사	33
05.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06.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51
07. 윈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원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한국남동발전	59
08. 지역특화산업 R&D 기술의 맞춤형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69
09.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한국정보화진흥원	77
10.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브랜드 컨설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7
11.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도로교통공단	95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관리체계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103
13.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 사업 예술의전당	109
14. 지역특성을 활용한 석유산업발전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석유공사	119
15. 항공-관광 협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한국공항공사	127
1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RS) 추진 한국장학재단	137
17.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	145
18.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3
19.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한국소비자원	161
20.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9
21.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177
22.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공단	187
23.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도로공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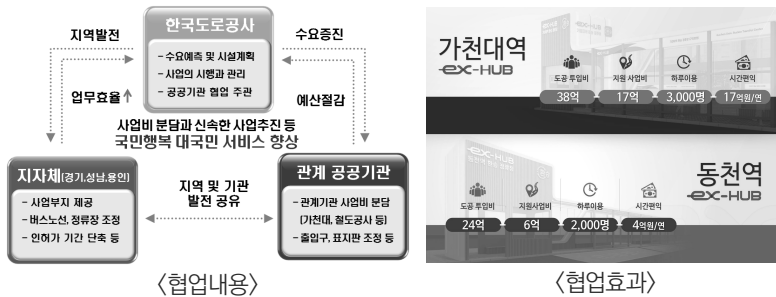
고속도로 EX-허브 (대중교통 환승시설) 추진

고속도로 EX-허브(대중교통 환승시설) 추진

요약

□ 협업특징

- (문제점) 고속도로는 나들목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 (협업방안) 지자체(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가천대학, 경기철도,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는 시설(가천대역, 동천역)을 설치하고 버스노선 유치
- (협업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로 국민 교통편의 증진, 대도시 교통 지체체 개선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국민

경기도 수원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많은 차들로 인해 매일 출퇴근 시간이 고생이다. 특히, 버스가 혼잡해서 내내 서서기는 날이면 온 몸에 진이 다 빠진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막힐 때 건너편에 보이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 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경기도 성남에서 평택으로 통학하는 학생 L씨는 매일 아침 시내에 있는 터미널로 가서 평택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탄다. L씨는 집 근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터미널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고속도로 위에 정류장이 생기면 이용이 편리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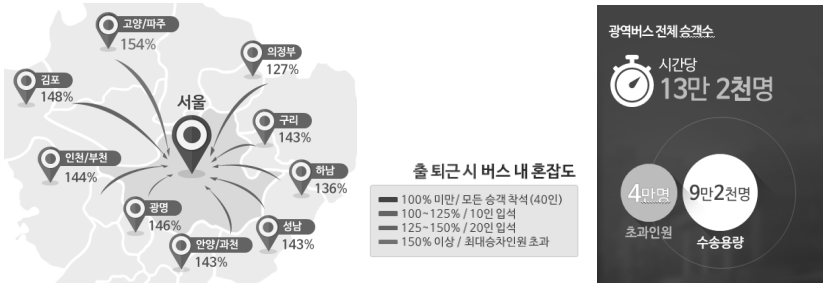
그동안 고속도로는 나들목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어 고속도로 주변 목적지에 내리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나들목 주변은 진출입 차량으로 더욱 혼잡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나들목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상에서도 대중교통 시설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다면 A씨와 L씨는 보다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에서 도착까지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신도시 건설 등 교통 수요증가 및 혼잡

최근 고속도로 지정체는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생활권의 확대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역 간 교통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 고속도로의 지정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도로교통 지정체와 버스 혼잡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출퇴근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평균 혼잡도는 144%에 이르고 있다. 즉, 세 명 중 한 명은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한다면 광역버스나 시외버스가 시내도로로 진입하지 않고도, 고속도로에서 바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 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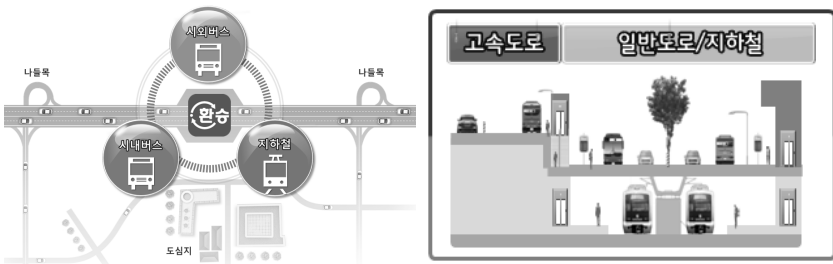
수 있어,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주변 시내도로에 지정체를 유발하지 않고 버스의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 별도의 증차 없이도 버스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어 지정체가 개선되어 통행시간 역시 단축할 수 있다.



〈출퇴근시 서울·경기도 간 광역버스 혼잡도 및 수용인원 현황〉

국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니즈(needs)를 파악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인 **ex-HUB**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고객이 나들목으로 나오는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교통 지정체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 ex-HUB : Expressway(고속도로)+HUB(교통중심), 고속도로 환승정류장·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 시설

새로운 발상으로 시작된 사업

고속도로와 대중교통이 연계된 고속도로 환승시설은 나들목으로 진출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지정제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환승정류장 설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실제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환승시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사업비 대비 수요와 편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외곽선 가천대 부근과 경부선 동천동 부근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두 곳 모두 시가지에 위치하여 기본 이용 수요가 있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환승이 편리한 곳이다. 또한, 상하행선을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인접하여 육교나 지하차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정류장 설치 시 별도 구조물을 확장하거나 설치 할 필요가 없어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곳이다.



다양한 이해관계, 복잡한 행정절차, 그리고 사업비!

고속도로 환승시설 설치에는 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버스 사업자, 그리고 시설 이용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시설 설치에 따르는 행정절차도 복잡한 어려움이 있었다.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시설의 설치공사와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도로구역결정고시부터 각 지자체의 도로건설과, 시설녹지과 등 행정부서와의 협의와 인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정류장 신설을 위해서는 버스정책과 등 관계부서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정류장 설치가 되어도 버스노선 유치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조합의 협조와 개별 버스사업자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여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환승정류장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들의 재원 부담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지자체 등 관계 기관 역시 고속도로 시설투자에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강력한 협업과 책임감 부여를 위한 협약과 관계기관으로 협업 확대

한국도로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먼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하였다. 본 시설이 교통편의 향상에 따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정류장 설치 위치, 인허가 간소화, 사업비 분담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관계자들 간의 연속회의, 관계기관 워크숍 등 다양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기관별 강력한 협업추진을 위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용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공에서 환승 정류장 시설 설치를 주관하되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지 제공, 지장물 철거 등 공사 지원, 공사시행을 위한 인허가 지원과 환승정류장 설치 인허가

등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업무분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관계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확대하였다. 먼저, 환승시설로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철도와는 환승 정류장 진입로 개설, 보도부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에 관해 협업하였고, 환승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는 가천대학교로부터는 사업비의 일부(3억원)를 현금지원 받았다. 즉, 본 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기업, 대학교,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 환승정류장에 버스를 어떻게 정착시키나?

(경기도와 버스노선 유치 협업) 환승정류장이 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환승정류장에 노선버스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먼저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을 설득하였다. 버스운송조합은 버스사업자들의 모임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버스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는 본 시설이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버스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개별버스 사업자들과도 접촉하여 본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환승정류장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에 광역버스 4개 노선(1112, 1650, 8109, 8409)과 시외버스 2개 노선(성남-춘천, 동서울-평택)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였다.

서울외곽선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15.12.29)	경부선 동천역 환승정류장 ('16.1.30)
<p>성남IC, 성남TG,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송파IC 성남대로, 가천대역 (분당선), 시내버스 정류장 성남시내, 가천대학교</p>	<p>동천역 (신원당선), 시내버스 정류장, 서울고속도로(신원당선)교차로, 신수로, 현교IC 죽전유계소, 동천역 환승정류장, 서울TG</p>
<p>성남시내, 가천대·동서울대 등 연결</p>	<p>용인 수지·성남 분당 시내로 연결</p>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가 알려진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부 제2차 관 주재로 환승시설 활성화를 위한 TF가 발족되었으며, 우수사례로 ex-HUB가 소개되었다. 동천역 환승정류장 개통 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고속도로 환승정류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추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은 정부 국가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이다.

타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시설투자 선례와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

ex-HUB는 고속도로 시설이라도 지역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선례를 만들어 향후 본 시설의 활성화 및 확대설치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들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막히는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유롭게 환승하여 고속도로 이동거리 단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ex-HUB가 활성화 될 경우 수도권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율, 지방에서는 신설 버스노선이 증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EX-HUB의 확대 및 활성화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은 다양한 형식으로 수요와 편익, 지역특성,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들과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본 시설의 활성화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고속도로 환승정류장(평면형)〉



〈고속도로 환승정류장(입체형)〉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고속도로 터미널형 복합환승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동서발전

02 산학공 협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학공 협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요약

□ 협업을 통한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자원순환사회 구현

- (문제점)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 증가로, 발전 부산물인 석탄재 발생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석탄재의 재활용 기술 및 신규 용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재활용의 한계에 직면함
 - 발생전망 : '14년(880만톤) → '22년(1,472만톤)으로 67% 증가
 - 수요전망 : 전통적 수요(레미콘 혼화재, 시멘트 원료) '14년 수준 유지 전망
- (협업방안) 기관별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석탄재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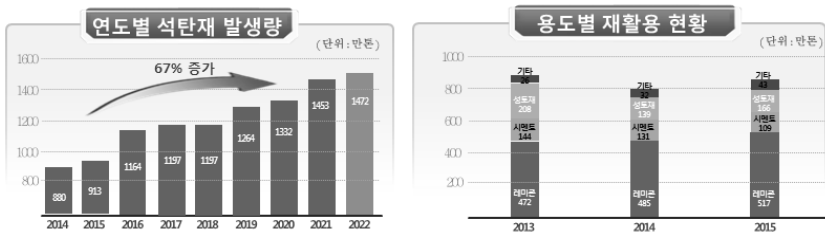
동서발전	+	공주대	+	익성텍
석탄재 분석자료 및 연구비 등		친환경콘크리트 전문 연구인력 활용		생산시설 및 기술

- (협업효과) 석탄재 재활용 확대 및 건축용 건식벽체 신규사업 창출
 - 동서발전 : 석탄재 연간 약 30만톤 재활용 증대로 매립비용 등 절감
 - 익 성 텍 : 고품질의 저렴한 건축용 건식벽체 신규사업 진출
 - 국 가 : 온실가스 연간 약 26만톤 저감 및 무량복합구조 아파트 건축 확대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에 기여

석탄재는 활용가치가 높은 순환자원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석탄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석탄산지의 토양 등 광물질이 약 1,500℃의 연소과정에서 용융되었다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형성된 20~30 μ m 크기의 다공성 구형입자이다. 고온에서 소성된 석탄재는 인공 포졸란 물질로 일반 시멘트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장기강도, 수밀성, 내화학성 및 내염해성 등이 증가하고, 수화열과 알칼리 골재반응 등이 감소하는 등 콘크리트의 특성을 보완하는 활용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이다. 또한, 화학조성이 일반 토양과 유사하여 환경적 유해성이 없으나 현행법으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석탄재의 전통적인 주요 재활용 용도는 레미콘 혼화재와 시멘트 원료 등인데, 주택 보급률 향상과 국내 SOC 기반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건설시장이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수요는 201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증설로 2022년 석탄재 발생량은 2014년 발생량 880만톤보다 67% 증가한 약 1,47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등의 신규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고품질의 저렴한 건식 건축자재 수요증가

국내 벽체용 건식 건축자재는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및 석고보드 등이 사용되고 있고, 지하 이중벽, 방음벽 및 실내 칸막이벽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비용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물리적 특성 요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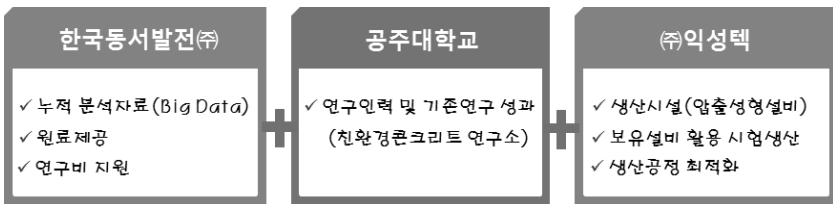
건을 충족하지 못해 광범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방식이 벽식 구조에서 무량복합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세대내 비내력벽에 대한 건식 건축자재의 대규모 신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재료가 없는 실정이다.



보유역량을 활용한 산학공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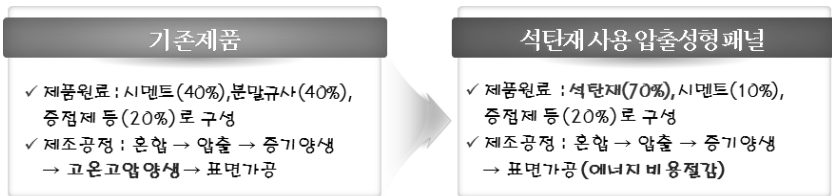
동서발전은 석탄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수요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재활용 분야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및 안정적 수요창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 압출성형 방식의 건식 건축자재 생산에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 인력과 연구경험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주대, 그리고 압출성형 방식 건식 건축자재를 생산설비 및 기술을 보유한 익성텍 등과 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익성텍에서 보유한 압출성형방식 생산설비는 콘크리트 제품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대량생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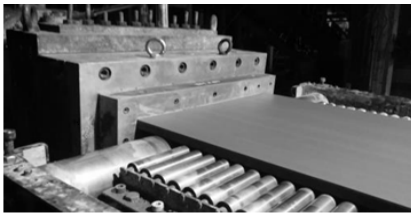
동서발전은 당진, 호남, 동해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석탄재에 대하여 국가별, 산지별, 탄종별 석탄재에 대한 방대한 분석 자료와 선행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원료의 70%를 석탄재로 대체한 건식 건축자재 개발

공주대 친환경연구소 연구팀은 일반 시멘트에 비해 실리카(SiO_2) 함량이 낮고 알루미늄(Al_2O_3) 함량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시멘트의 칼슘(CaO)-실리카(SiO_2) 중심의 결합반응을 알카리 자극제를 활용한 칼슘(CaO)-알루미늄(Al_2O_3) 반응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익성텍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생산과 물성 시험을 통하여 최적의 재료 조합비율과 생산 공정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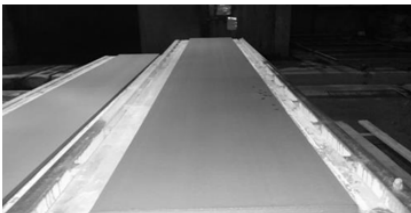
▼ 석탄재를 사용한 건식 건축자재 생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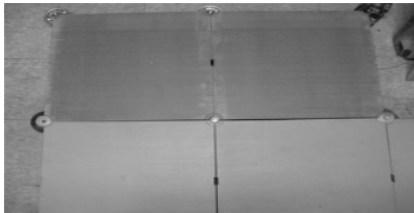
〈압출〉



〈절단〉



〈제품(판넬)〉



〈2차제품(이중바닥재)〉

개발된 생산 공정에서는 석탄재 중 활용가치가 높은 비산재(Fly Ash)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활용 수요가 부족한 바닥재(Bottom Ash)를 보형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석탄재를 활용한 건식 건축자재의 우수한 품질 인증

건식 건축자재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특성이 다르다. 석탄재를 활용한 건식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휨강도, 수평하중 저항성, 내충격성, 차음성능 등 범용 건식 건축자재로서 우수한 품질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2시간 내화인증을 취득하여 내화재로서의 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하중시험〉



〈휨강도시험〉



〈내화인증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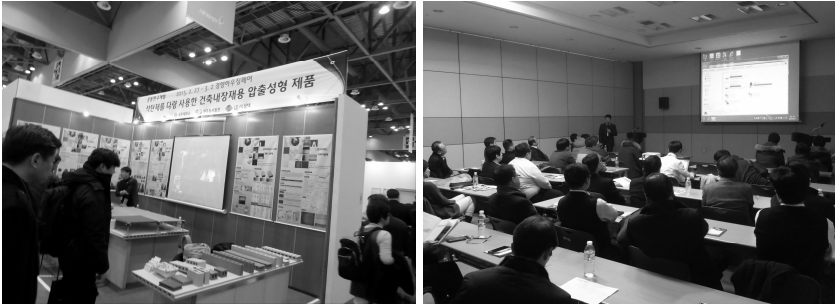
〈차음성적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건식 건축자재의 이상적인 조건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높아야 하는데 석탄재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과 함께 기존 대비 30% 가량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중량이 15% 정도 줄어들어 작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압출성형방식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와 제품 생산이 가능해 제품의 적용분야가 매우 넓다.

석탄재를 활용한 건식 건축자재에 대한 반응

동서발전과 참여기관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석탄재 활용 건식 건축자재를 지난 2015년 2월 KINTEX에서 열린 경향하우징페어에 전시하여 관람객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전시 기간 중 건설사, 설계관련 종사자 등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술설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개발제품에 대한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협업효과

동서발전은 「석탄재로 재료의 70%를 대체한 건식 건축자재 생산기술 개발 및 사업화」로 연간 약 30만톤의 석탄재를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년 26억원의 매립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석탄재 매립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원이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하는 바 크다.

한편, 참여기업인 익성텍은 압출성형 건식 건축자재의 생산에 있어 재료비용과 공정 단순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으며, 건축자재의 무게를 약 15% 경량화하는 등 시공성이 개선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자원순환사회의 구현뿐만 아니라 탄소저감형 건축자재를 개발·사업화함으로써 국가목표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1톤 생산을 위하여 약 0.87톤의 CO₂가 발생하는 데 비해 석탄재는 0.014톤의 CO₂가 발생하여 연간 30만톤 정도의 석탄재가 시멘트를

대체할 경우 약 26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확대

향후 건설사 등과 석탄재 건식 건축자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건축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여 무량복합구조의 아파트 건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와 가변형 구조 아파트 건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품은 현재 호주, 대만 등과 수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건축용 석재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적극 확장할 계획이다.

발전시설은 석탄재, 중유회 및 석고 등 다량의 산업 부산물이 발생됨과 동시에 발전용 보일러를 활용하여 유기성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정부의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3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요약

□ (문제점) 보호자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검진 서면관리 불편에 따른 민원 및 보호자 개별검진비용 부담 등 발생

- (보호자)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 제출, 영유아 검진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검진비용을 따로 부담
 - (어린이집) 영유아 검진 실시 의무화, 검진결과 서면관리 불편
 - (검진기관)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민원으로 업무 가중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수검여부 서면 확인으로 불편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 (협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영유아 검진정보 전산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검진정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
-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자 및 어린이집에 검진정보 제공, 검진시기 알람서비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건의, 시스템 개선사항 등 모니터링 협조

□ (협업효과) 공공기관 간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로 국민편익 제고

- (보호자) 146만명 검진통보서 서면제출 생략 및 공단 검진 수혜로 일반검진비용 부담 해소
 - (어린이집) 48천 개소 검진통보서 보관·관리 간소화로 보육업무에 전념
 - (검진기관) 4천 개소 검진통보서 재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한국보육진흥원) 검진내역 확인 전산화로 행정업무 간소화
 - (공단) 검진통보서 재발급 비용 및 행정업무 감소
- 매년 105억원 비용절감(보호자부담 검진비용 68억원, 검진결과서 재발급 비용 37억원)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11.15.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연간 320만명, 총 10회의 검진(구강검진 3회 포함)을 본인부담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 질환은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이다.

2015. 12월 현재 검진대상자의 46%(146만명)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보육 영유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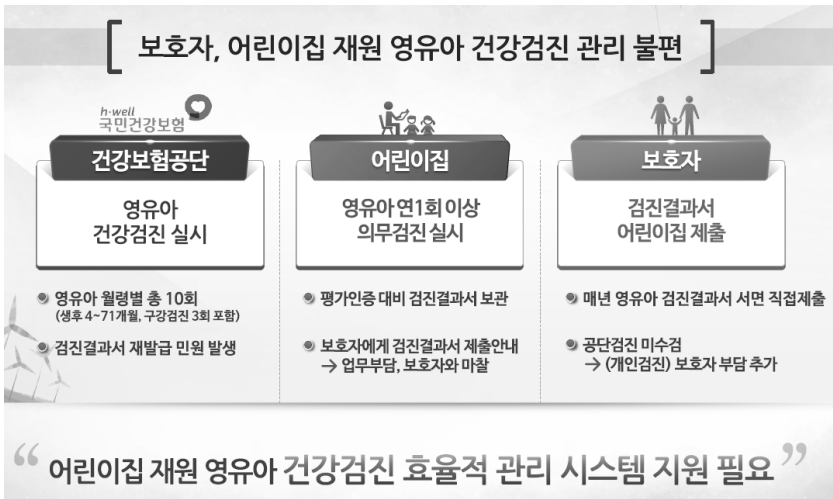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보호자는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고, 통보서를 분실할 경우 검진기관 또는 공단에서 재발급받아야 했으며, 검진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검진을 받아 검진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어린이집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또는 평가인증에 대비하여 통보서를 보관·관리해야 했으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제출을 독촉해야 하는 업무부담도 있었고 독촉과정에 보호자 항의도 자주 발생했다.

또한 검진기관은 보호자의 재발급 민원으로 업무가 가중되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위해 수검여부를 어린이집이 보관·관리하는 통보서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와 같은 보호자, 어린이집, 검진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사업 소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4개 기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검진정보(검진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에서 공단이 제공하는 검진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어린이집입소신청서’ 작성


시에 'PUSH 수신여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매 검진시기에 대하여 알람(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업무 연락 목록'을 통해 매 검진시기 도래 영유아에 대한 알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가 '보육사업 안내'를 개정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에 영유아 수검유무를 서면에서 어린이집의 전산 확인·출력 자료로 대체되도록 하였다.


◎ 각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마련

 건강보험 공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간 협업 주도적 추진 2 개인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 승인 3 검진정보 연계 전산시스템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 영유아 검진정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 5 대국민 홍보 실시
 SSIS 사회보장 정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진정보 연계 전산시스템 개발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주민등록번호 공단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 영유아 검진정보 이용지원 전산개발 → 검진시기 알람서비스 추가 개발 (보호자와 어린이집 용)
 한국보육 진흥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건의(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평가: 서면 → 전산 확인 2 시스템 개선사항 등 모니터링 협조 	


 협업기관 h-well 국민건강보험


 SSIS 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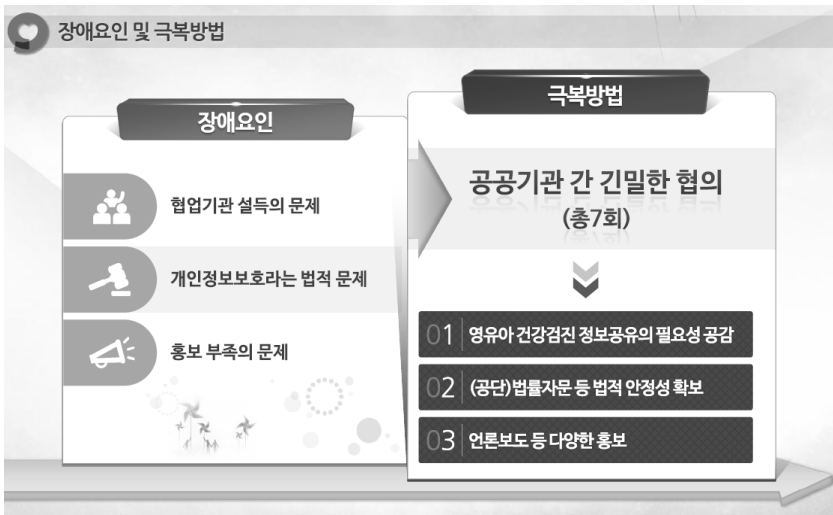
추진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린이집별 재원 영유아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및 마련, 정보연계 전산 시스템 개발,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대국민 홍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장애요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4개 기관의 협업과 역할 분담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먼저, 3개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이 1차 사전 업무협의(2014.8.26.)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의 영

유아 건강검진제도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의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공유를 통해 영유아 검진정보의 전산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2차 업무협약(2014.11.13.)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및 ‘개인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 승인(공단)’ 등에 근거하여 기관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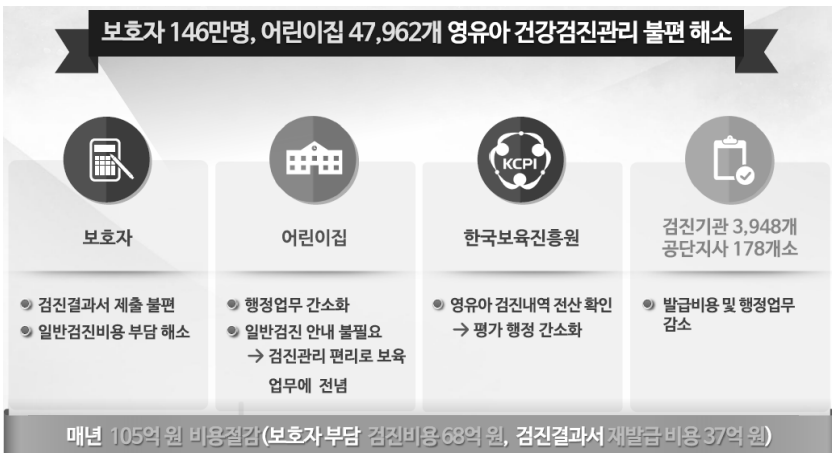
전산연계 시스템 개발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1차 업무협약의(2014.12.10.)를 통해 검진정보 연계범위, 연계방법 및 시기 등으로 가확정하였고, 2차 업무협약(2015.1.9.)에서는 전산연계 시스템 개발 순위, 정보연계 Layout, 제공 주기 등을 논의 및 확정하였다. 검진정보 연계범위, 연계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3개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2015.2.26.)를 통해 최종확정하고 2015.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전산연계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를 위해 전산연계 시스템 개발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업무회의(2015.5.528.)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5. 7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공유를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은 업무협약(2015.7.21.)를 통해 정보공유의 질 향상 방안 발굴 및 개선 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와 같이 4개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간 적극적인 역할분담 수행으로, 2015.7.1.부터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린이집 중앙연합회 및 시군구 지부 간담회 180회(2015.1.~5월), 9월부터 매월 27만명의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내문 우편발송, 뉴스 등 7개 언론보도(2015.9.24.) 등을 실시하였다.

성과·효과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로 인한 국민편의 향상 및 행정업무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첫째, 보호자는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어린이집 서면 제출 및 일반검진비용 부담이 해소되었음은 물론, 어린이집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서면관리 생략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일반검진 안내 불필요, 영유아검진 시기 알람 서비스로 검진관리가 편리해졌다. 그리고 검진기관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필요로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검진내역 점검이 개인별 서면 확인에서 전산열람·출력 자료로 대체되어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비용 및 행정업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 47,962개 어린이집, 1,461,841명 영유아(전체 검진대상의 46%), 3,948개 검진기관 수혜('15. 12월 기준)

성공요인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는 4개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협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보육사업 안내 개정,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분담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었다.

향후계획 등

2016년에는 전국 8,826개 유치원 재원 원아 652,546명에 대해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5. 4월부터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유치원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가 연계되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66%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04

산학연관 2인3각 물 산업 한류를 꿈꾸다

산학연관 2인3각 물 산업 한류를 꿈꾸다

- 물산업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Total Care 서비스 구축 -

요약

□ 국내 물 산업 중소기업 Total Care 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문제점) 세계 물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정보·전문인력 부족 및 낮은 기업 인지도로 인하여 해외 진출의 어려움 호소
- (협업방안) K-water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K-water 중심 하나된 국내외 25개 전문기관



- (협업효과)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로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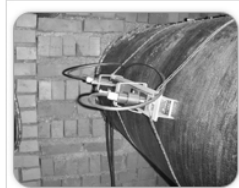
국산화는 성공했지만, 성능검증 등으로 난항을 겪던 J사

과거 초음파유량계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산 일색이던 시절, 유량계 국산화에 앞장 섰던 여러 기업들이 줄도산했음에도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었던 J사 대표 S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렵게 초음파유량계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성능 검증 시설 미비, 마케팅 능력 부재 및 국산제품에 대한 불신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결방안이 절실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K-water의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K-water는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다. 먼저 K-water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시설을 이용하여 성능검증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실증을 위한

Test-bed를 제공하여 내구성을 검증한 후, K-water가 성능을 보증하는 인증브랜드를 발급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미국 등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블루골드, 1,000조원 물 시장 선점

물은 희소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귀중한 자원인 ‘블루골드(Blue Gold)’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인구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산업 중소기업은 기술역량이 우수한 반면,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다듬는 장인의 마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국내 물 산업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자금, 성능인증, 판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유일 물 전문 기관인 K-water가 구심점이 되어 범정부적 물 산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K-water 중심의 산학연관 2인3각 협업체계 구축

K-water는 풍부한 해외사업 경험과 높은 해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K-water를 중심으로 국내·외 25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각 협업기관별 전문성과 윈-윈 전략을 반영하여 자금지원, 기술이전, 정책개발, 성능시험을 지원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물 산업 한류화를 향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産)	학(學)	연(研)	관(官)
특광역시, 하나은행, 싱가포르 PUB 등 11개	아주대 등 6개	한국기계연구원 등 3개	국토부, 중소기업청 등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실증현장 제공 • 시장확대,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 연구지원 •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시험 지원 • 연구개발 • 국가R&D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 • 제도개선 • 해외진출 지원

맞춤 처방 Key Solutio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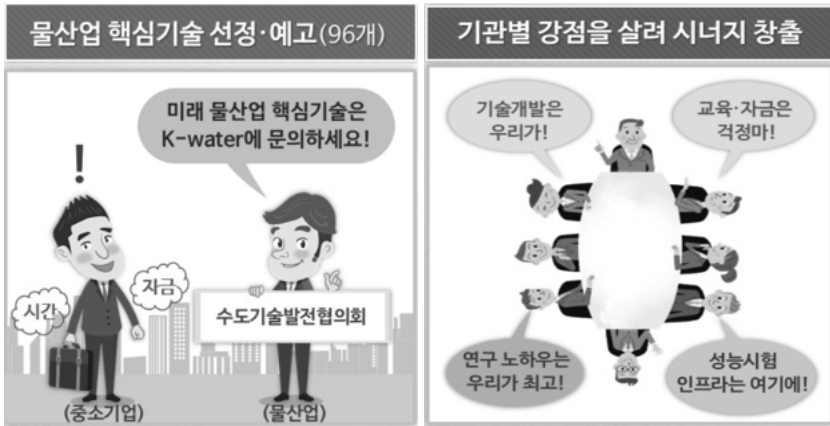
중소기업별 역량 및 여건에 맞춰, 기술개발부터 판로확대까지 4개의 맞춤형 처방 Key Solution을 선정하였습니다.



Key Solution #1 :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확한 방향제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 특·광역시 등 물 산업 핵심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 물 산업 핵심기술 96개를 선정·예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기술로 선정된 다채널 탁도계는 S사가 개발에 성공하여, K-water 충주정수장에서 우수한 성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진입에 성공,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관 기관별 강점을 총동원하여 높은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기술개발비 39억원 지원, 54건 기술이전을 통한 46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Key Solution #2 : 금융지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결국 사업자금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K-water는 K은행과 손을 잡고, Water+론을 출범하였으며, 133개사에 기술 개발 및 운영 자금 573억원을 지원하여 생계형 중소기업들도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Key Solution #3 : 성능보증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 해외바이어들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애로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해외 인지도로 마케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K-water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K-water형 인증브랜드를 개발, 12개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어떠한 검·인증 결과보다도 더욱 확실한 마케팅 방법은 바로 고객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고객인 싱가포르 PUB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 최초로 해외 현지 Test-bed를 활용, 검·인증 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현지화 사업의 Role Model을 정립하였습니다.

Key Solution #4 : 판로확대

중소기업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창출이며, K-water만의 물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물 산업 주 수요처인 특·광역시와 손을 잡고 공동검증 및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국내 842억원 매출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출 전문 기관인 KOTRA 등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으로 356억원 수출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4가지 Key Solution은 협력 중소기업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과 찬사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몇몇 중소기업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기술진단보고서에 제도 및 우수기술 등을 수록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한 소중한 성과

K-water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협업의 힘을 확인하였고, 또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736명, 해외수출지원기업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테스트베드 및 투자재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은 협업 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여 협업목적인 국가경제 활성화 및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물 산업 한류를 꿈꾸다!

앞으로도 K-water는 새로운 시도와 가치 창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물 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동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물시장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국가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서 2020년까지 일자리 창출 6,000명, 중소기업 1조원 매출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5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요약

□ 협업을 통한 해외동반 맞춤형 진출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제고

- 문제점
 - 중소기업 : 낮은 해외 인지도로 인해 저가 판매 불가피, 바이어 신용정보 부재로 수출계약 리스크 증가, 높은 해외마케팅 비용으로 해외시장 진출 포기
 - 대기업 : 국내외 안정적인 Supply Chain 확보 필요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으로 동반진출지원사업 추진 애로
 -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용불량 바이어와 수출계약으로 리스크 관리에 부담
 - KOTRA : 단독 해외시장 개척으로 사업성과 제고 한계
- 협업방안
 - CJ E&M이 주최하는 해외 대형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 홈쇼핑 등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실시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바이어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도 높은 바이어 발굴

• 협업효과

- 중소기업 : 해외인지도 제고, 마케팅 비용부담 최소화, 계약가능성 제고
- 대기업 : 검증받은 증기제품을 통해 현지 소싱 문제 해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동반성장의 무대를 해외로 확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우량 바이어와 수출계약 확대로 리스크 헷지
- KOTRA : 해외 대형행사 연계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협업의 필요성 및 역할분담



수출은 하고 싶은데, 인지도가 낮아 해외바이어가 만나주지도 않고 설령 어렵게 만나더라도 믿을 만한 바이어인지 알기도 어렵고, 무리한 수출단가인하요구, 해외마케팅 노하우 부족과 높은 마케팅비용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출하기 너무 막막하고 어렵네요!

이처럼 중소기업이 해외수출 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은 한둘이 아니다.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난관들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기업에 머무르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다. 여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를 통한 수출성과 제고' 사업을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한 이유이다.

대·중소 해외동반진출사업은 대기업의 글로벌 네임밸류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은 국산 중소기업 제품 소싱을 통해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대기업이 주관하는 해외 대형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한류란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K-CON 등 대형 한류 콘서트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행사장에서 전시·판매하고, 미주, 중화권, 일본 등 주요 국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주선함으로써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트렌드의 대·중소 동반진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 한류 활용 해외 동반진출사업 (MAMA :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홍콩)



대기업의 기존 해외유통망과 해외 대형 한류행사를 활용하는 한편, 신뢰도 높은 바이어 발굴로 중소기업의 수출계약 리스크를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12만건이 넘는 바이어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기관별 고유역량 및 자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대기업(홈쇼핑 4개사, CJ E&M)이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류의 후광효과! 중소기업 수출제품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덧입히다.

KOTRA는 한류지수조사 결과 및 현지 시장성 조사 등을 통해 우선 타겟마켓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재단, CJ E&M과 함께 동반진출사업이 추진가능한 해외 대형 한류행사로서 K-CON LA, K-CON TOKYO, 홍콩에서 열리는

MAMA(Mnet Asian Music Awards)를 선정하였다. 한류를 활용한 동반진출사업의 컨셉은 다음과 같다. CJ E&M은 한류콘서트를 개최하고, 협력재단은 B2C 중소기업제품 판촉전을 운영, KOTRA는 중소기업의 B2B 수출상담회를 총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돕는다.

▼ 해외 대형 한류행사 활용 해외 동반진출사업

K-CON TOKYO 동반진출	K-CON LA 동반진출	MAMA 동반진출
		
2015.4.19~23 / 도쿄 중소기업 (38개) / 해외바이어 (83개사)	2015.7.31~8.2 / LA 중소기업 (33개) / 해외바이어 (83개사)	2015.11.30~12.4 / 홍콩 중소기업 (47개) / 해외바이어 (85개사)

K-CON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K-CON은 역량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비빌 언덕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류를 활용한 K-CON과 MAMA 동반진출사업은 중소기업에게 소비자 대상 판촉전과 해외바이어 대상 수출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 Tool로서 평가받고 있다. 수출상담회에 초청된 해외바이어는 한류콘서트를 통한 ‘Made in Korea’ 제품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과의 상담 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총 3회 한류행사 활용 동반진출사업을 통해 118개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 251개사와 663건(23백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하였고, 신규수출을 달성한 기업도 13개사나 되었다. MAMA의 경우, 전세계 16개국에 생방송되는 등 3,493억원 수준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CJ측은 밝혔다.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소비자재 중소기업의 든든한 수출지원군이 되다.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은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오프라인은 물론 홈쇼핑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홈쇼핑 대기업(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판매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12개국 23개 방송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동반진출은 이처럼 대기업이 기 진출한 해외 홈쇼핑 방송에 중소기업 제품을 노출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KOTRA는 협력재단과 함께 2015년 수출유망 소비재 기업 300개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00개 기업 대상 수출지원을 위한 영문·중문 리플릿 제작을 지원하고, KOTRA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유망소비재 300개사 선정사업과 함께 아래의 4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해외 동반진출사업



2015.3.26 / 쿠알라룸푸르
중소기업 (18개) / 해외바이어 (19개사)



2015.5.27 / 서울
중소기업 (180개) / 해외바이어 (58개사)



2015.9.1~9.5 / 멕시코시티
중소기업 (8개) / 해외바이어 (9개사)



2015.11.3~4 / 서울
중소기업 (461개) / 해외바이어 (204개사)

총 5회 대기업 유통망 활용 동반진출사업을 통해 967개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 290개사와 824건(186백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하였고, 61개 기업이 신규수출에 성공하였다.

민·관이 손잡고 지원해주니, 중소기업도 수출에 자신감이 생겼네요

2015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수행된 CJ오쇼핑 동반진출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하고, KOTRA에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신뢰도 높은 인근국가 바이어와의 상담도 주선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마치 one-stop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8개 협업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협업 성과

구 분		정성적 협업성과
정성적 성과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네임밸류와 한류 후광효과를 통해 해외 인지도 제고 대기업 해외 유통망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신뢰성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으로 계약 가능성 제고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검증받은 중기제품을 통해 현지 소싱 문제 해결 해외진출을 통한 상생의 동반성장 성과 확대
	협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진출을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 성장파이가 커지는 Positive Sum으로 인식 전환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사업 기획 가능
	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신용불량 바이어 거래를 사전 차단 우량 바이어와 수출계약 확대로 리스크 헷지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대형행사 연계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불량 바이어와의 수출 거래 위험을 최소화
정량적 성과	참가기업 수출증가액	• 125백만달러(24% ↑)
	신규수출기업	• 74개사(12백만달러)
	국내외 언론홍보	• 1,238건
	참가기업	• 785개사(8개 사업)
	B2B상담주선	• 541개사(해외바이어)

[성공사례 1]

속눈썹용 시술제품을 개발한 A사는 CJ E&M에서 추진한 K-CON 연계 동반진출사업에 참가하여 신뢰도 높은 바이어와 상담주선으로 164천달러 신규 수출을 달성하고 현지 유력 유통망과 지속적인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성공사례 2]

마스크팩 제조사인 B사는 아시아 최대 음악축제인 홍콩 MAMA 연계행사에 참가하여 언론과 6만여명의 고객에 노출되고 현지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와 한 달 만에 수출이 성사되어 44천달러 최초 수출을 달성하였다. 2016년 1월, B사 대표는 대통령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외동반진출 성공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KOTRA는 협업을 바탕으로 대·중소 해외동반진출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중이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은 전망이지만, KOTRA는 수출부진 회복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규수출기업 5,000개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에서 이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MOU 체결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체결기관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1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반진출 공동지원 1) 해외동반진출사업 협력 및 공동수행 2) 해외동반진출 유망 중소기업 공동발굴 및 지원 3) 국내외 대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p>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공동지원 MOU 체결식</p>
한국무역 보험공사 (15.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융복합형 협업체계구축 1) 양기관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2) KOTRA 직원이 무보의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p>기능융복합형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p>

인천국제공항공사

06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요약

□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제점) 인천공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주로 대규모 사업권을 정부 계약법에 따라 입찰하여 개인단위의 예비창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상 높은 벽이 존재
- (협업방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존 영세법인에 인천공항 내부자원, 구체적인 창업아이디어 등의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거쳐 지역사회와 소통이 채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협업효과) 예비창업자 및 기존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기회 제공 및 신규일자리 창출

저성장, 실업증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데...

저성장, 실업증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시대에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과 함께 청년고용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산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공항공사의 전략적인 교차점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과제 세부목표를 인천공항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공기업의 미지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을 필요함을 인식하고 협업기관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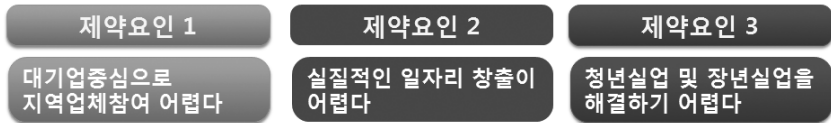
협업기관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업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가능한 협업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한 부합한 협업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정책연구원과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사회적 일자리 누구와 어떻게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업목표와 협업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하였다. 먼저 인천공항의 사업은 면세점, 식음료 등의 사업권과 항공사, 여행사 사업자 등 대기업 중심의 사업권으로 중소기업의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렵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기반이나 인적자원 등의 보유자원의 한계로 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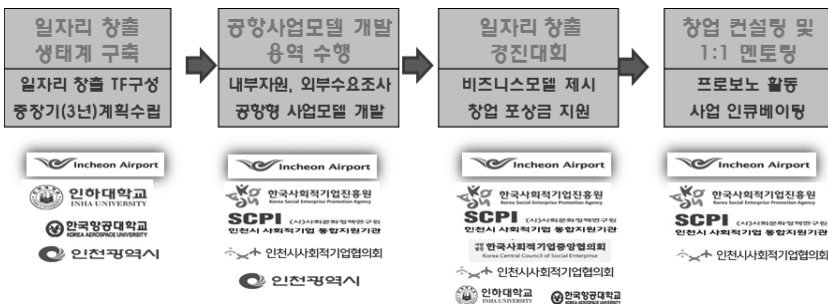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SOC사업을 실시하면서 얻어지는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한 상대적인 수치이지 실질적인 고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 및 장년실업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은 물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장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정책도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 앞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협업기관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 끝에 공기업의 역할 재정,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회적 경제활성화, 청장년 융합일자리 창출이라는 4가지 해결책을 찾아냈다.

공기업의 일자리에 대한 역할 재정을 통해서인 인천공항의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즉 직접고용, 간접고용 외에 공사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제3의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은 기존의 공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성격을 깨는 혁신적인 사고의 출발점이었다. 이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제시 및 창업 마중물로 포상금을 지원하였다. 청년이 기획하고 장년이 고용되는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의 개발로 청년 및 장년의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하였다. 결국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인 인력고용 인건비 지원, 공공구매 자격부여, 세제감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업은 4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었는데 ①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② 공항사업모형 개발 용역 수행 ③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개최 ④ 창업 컨설팅 및 1:1멘토링의 순서로 추진되었다.

1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 인천공항 일자리 창출 TF 팀 구성
- 일자리 창출 중장기(3년) 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협업내용

- 중장기계획수립: 인하대학교
- MOU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네트워크 수립: 인천시,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기업협의회(중앙, 인천)

2 공항사업모형 개발 용역

- 지역사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용역
 - 기간 : '15.6-'15.10
 - 주요 과업 : 인천공항내부자원조사, 공항사업모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 공항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33개)



협업내용

- 용역 : 사회문화정책연구원(통합지원)
- 경진대회 : 사회적기업협의회(중앙, 인천)
- 모델 개발 : 인천시, 진흥원, 협의회

3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개최



- 경진대회 당선팀 선정 및 시상

- 창업팀 :10팀
- 성장팀 :10팀



협업내용

- 주최 : 인천국제공항공사
- 주관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문화정책연구원
- 후원 : 인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컨설팅 및 프로보노 멘토링

-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과 컨설팅
- 공식직원으로 구성된 프로보노 봉사단 발족 및 1:1 멘토링
 - 경진대회 수상팀에 대한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 멘토링



협업내용

- 프로보노 육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멘토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 컨설팅 :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협업과제의 주요성과는 공공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인천공항의 내부자원조사를 통해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이로써 공기업의 한계인 수익계약 제한, 기존사업권보호를 극복하여 창업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 다른 정량적인 성과로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쳐 4대 보험이 가입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경진대회는 창업팀(신규창업자)과 성장팀(기존사업자)인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었는데 창업팀에는 창업메리트가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을 창출하였고 성장팀은 현재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모델과는 달리 공항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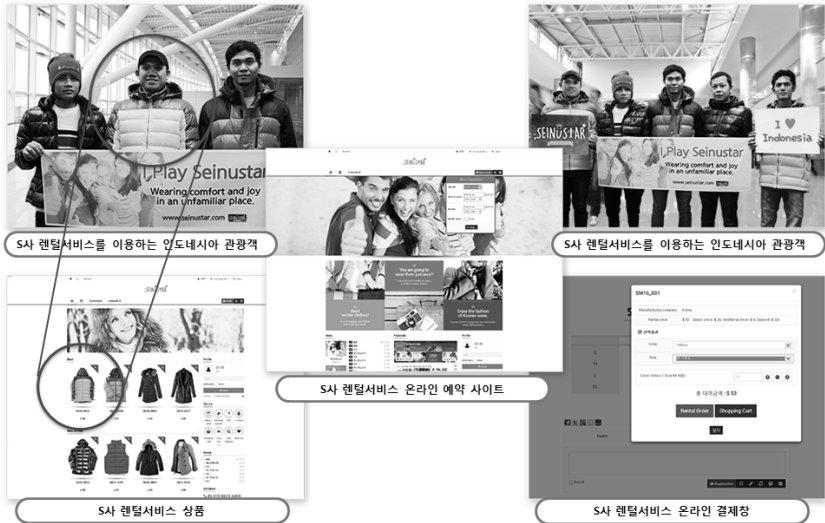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성과는 본 과제가 인천공항공사의 정책연구기반의 학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 과제를 하나의 협업모델로 모델링하면 타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S사는 인천소재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체하는 인천공항 서비스증진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경진대회 최고의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사업모델은 경진대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 모델을 참조하여 자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의류렌탈 및 리사이클링 서비스를 제안하여 당선되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의류 리사이클링 서비스로 의류리폼, 세탁, 보관, 관리, 배송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였다. 현재 동남아 관광객에게 의류 및 가용한 일회용품을 렌탈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향후 국내 공항을 비롯하여 해외공항에서도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 사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사회적 기업 우수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사례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적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남동발전

07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자원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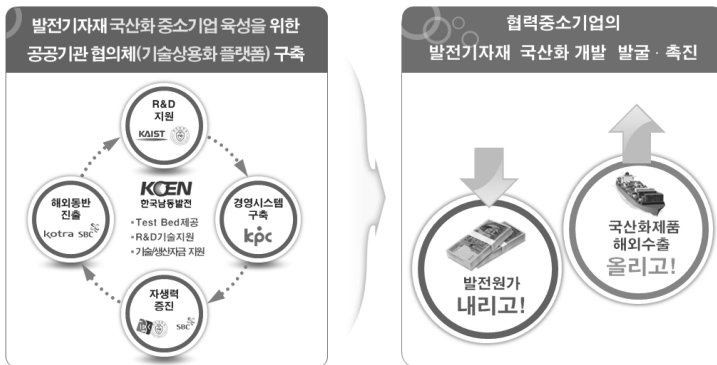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원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요약

□ 산-학협력 발전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통해 발전원가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시스템과 자생력 증진지원으로 해외동반진출 촉진

- (문제점) 발전기자재의 해외수입으로 조달기간 증가 및 발전설비 유지정비 비용의 증가로 인해 발전원가 상승 초래
- (협업방안) 산-학 협력으로 국산화 개발 및 해외 판로지원

* 기술상용화플랫폼 : Test Bed 제공, 기술·자금·홍보지원(남동발전) - R&D(KAIST등) - 경영시스템(KPC) - 자금·인력(IBK,중진공 등) - 해외진출(KOTRA)



- (협업효과) 원스톱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확대 기여
 - (발전자재 국산화 확대) 발전기자재 국산화 R&D 발굴, 수행, 국내최초 발전소 Test Bed 제공(Track Record확보)을 통해 협력기업 기술사업화 확대
 - (해외동반진출) 남동설립 수출대행사(G-TOPS), KOTRA, 민간네트워크 등 수출인프라를 활용하여 발전기자재 국산화 제품의 3,962만달러 수출계약 달성


외국기업에 독점화된 발전기자재의 국산화 절실해

발전소 기자재 핵심 부품은 외국기업(GE, 알스툼, 히타치 등)의 기술독점으로 인해 높은 설비유지비용 및 발전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국산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발전기자재 Supply Chain이 구축되어야 한다.

발전기자재 핵심부품 외산의존도 80%이상 기술 독점되어 결국,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정과제]

- 사업화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육성...




[CEO의 추진의지]

- 외자 기자재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추진하여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 협력중소기업에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15.1월 업무 보고서)




[중소기업 니즈]

- 발전기자재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Test Bed, 자금지원이 정말 필요해요...
- 발전기자재의 해외수출은 정말 어려워요.발전사가 후원자가 되어주면 시너지가 날 텐데.



[대학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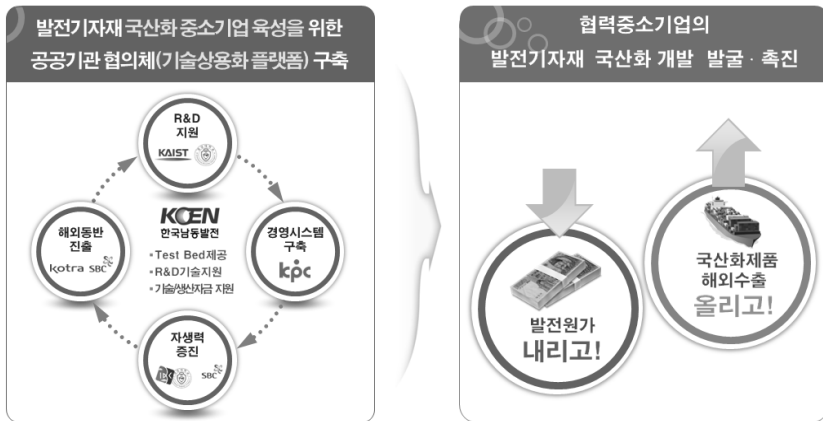
- 수입 발전기자재의 애프터 마켓(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 우수한 협력사를 발굴하여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중속을 해소해야...



이를 위해서 협력기업과의 기술 국산화 개발 공동협력, 기업자생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력기업 육성이 필요하였다.

발전기자재 국산화~ 중소기업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자!

발전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발전원가 절감, 개발제품의 품질개선, 자금지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래서 발전기자재의 기술개발에서 해외동반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술상용화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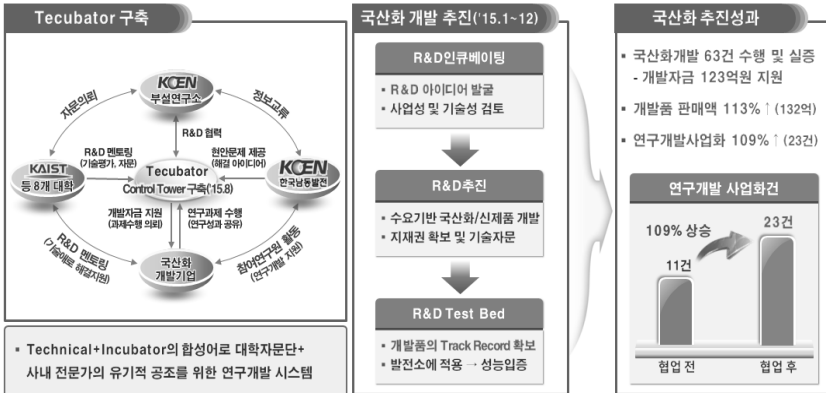
국산화 R&D 지원에서 해외수출까지 다자간 협업으로 접근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협업기관과의 이견사항을 조율하는 등 많은 협력이 필요하였는데, R&D 분야(KAIST 등 8개 협력대학), 품질개선 분야(한국생산성본부),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IBK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상대), 해외동반진출 분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R&D지원 (13/19년)	글로벌경영시스템 구축 (19년)	자생력(자금/인력) 지원 (19년)	해외동반 진출 (14/15년)
	KAIST KAIST 등 8개 대학	kpc 한국생산성본부	IBK SBC IBK · 중진공 · 경상대	kotra sbc KOTRA · 중진공
남동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TEST BED 지원(별전소) Tecubator Control Tower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 및 생산성 강화지원(15.4) 국산화 개발품 품질 수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지원(15.5) 지역대학의 협력중기재출지원(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행사(G-TOPS) 운영 해외민간네트워킹 신규지원(15.7)
협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인큐베이팅 컨설팅 産學硏 공동연구 - 기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품 품질개선 및 불량률 개선 경영 정보화 솔루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인력채용 및 장기재직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6개국 8개 무역관 지원 해외민간네트워킹 Pool 구성

① 국산화 기술개발 산-학협력으로 극복하다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 KAIST를 포함한 8개 협력대학 자문단과 남동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R&D Tecubator를 구축하여 국산화 R&D 발굴, R&D추진, 실증까지 협업으로 진행했다. 특히 R&D발굴을 위해 KAIST 100여개 LAB 활용 및 과제 기획을 R&D로 연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공기업 최초로 발전소를 Test Bed로 과감히 협력기업에게 제공하여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Track Record를 확보하였다.



② 개발제품의 품질개선에 역량을 집중

지속적인 매출을 통한 기업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개발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지원이 필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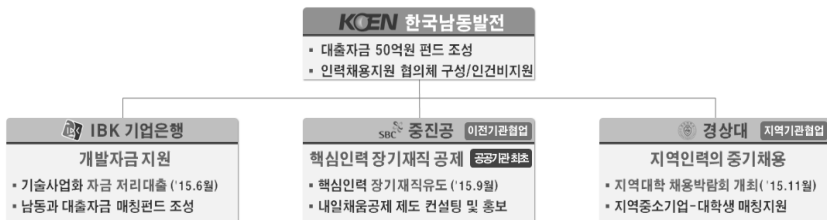
다. 하지만 중소기업 여건상 제품 생산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KPC(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 경영컨설팅 시스템 및 남동발전 사내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자문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유동성 위기, 인력난

흔히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단연 첫 번째가 갑자기 찾아오는 유동성 위기로 자재 대금의 독촉과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출자금 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을 공기업 최초로 시행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꾸준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지역대학인 경상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취업준비생을 협력회사에 매칭,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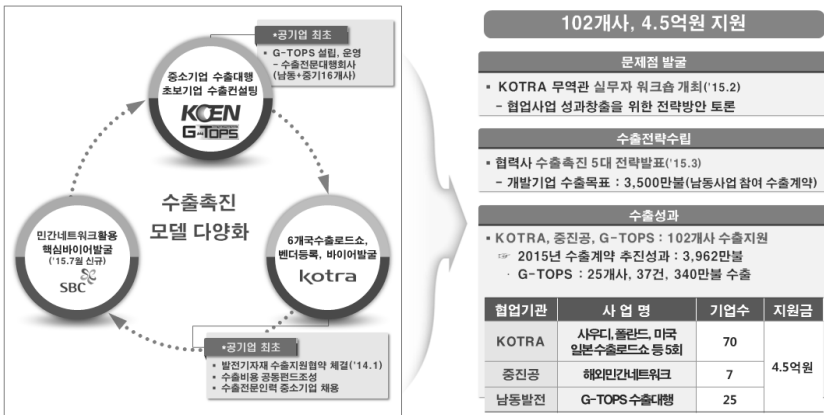
기술역량 향상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정부 고용디딤돌 정책과 연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역시 주요 성과 중의 하나다.



④ 국산화제품을 더 넓은 시장으로

국내에서 인정을 받은 우수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그 판로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전문대행회사(G-TOPS)를 직접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KOTRA와 발전기자재 해외동반진출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6대 수출유망지역을 선정하여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로드쇼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102개 회사의 수출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좀 더 확대하여 중진공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지원 판로 개척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설비 국산화, 그 결실을 맛보다

협력중소기업,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63건의 국산화개발, R&D실증에 123억 원을 투입한 결과 국산화개발제품 판매 협업 전 대비 113%가 증액된 132억원을 판매하였고, 수출지원사업에 참가한 협력기업의 수출계약은 협업전 대비 23배 증가한 3,962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였다. 수혜 중소기업 50개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협업전 대비 매출 20%, 고용 13%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3 -

남동발전 기술상용화플랫폼, 벤치마킹 대상이 되다


상생협력연구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에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례발표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하여 기술상용화플랫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발전기자재 수출대행사 G-TOPS는 2015년 12월 MOU 체결을 통해 발전산업 협력사는 물론 한국가스공사 협력사의 수출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 신기술 실용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국산화 개발로 발생된 성과공유 수익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성일터빈을 비롯한 11개 기술개발기업으로부터 발생한 1억원 상당의 성과공유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p>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집 발간 (상생협력연구회/15.10)</p>	<p>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발표 (전경련/15.11)</p>	<p>G-TOPS(수출대행사)의 가스공사 협력사 수출지원 진출(15.12)</p>
<p>▪ 공기업, 지자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에 3,000부 배포</p>	<p>다·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우수 사례 살펴보니... 한국남동발전은 이일종협의회 16개사와 공동으로 G-TOPS를 설립, 협력사의 수출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추진...KOTRA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교두보 확보전략에 나서고 있다. (15.11.6,파이낸셜뉴스)</p>	<p>전자신문 남동발전, 가스공사와 중소기업 수출촉진 협력 이날 협약은 양사가 협업을 통해 발전 및 가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글로벌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5.12.8,전자신문)</p>

신기술실용화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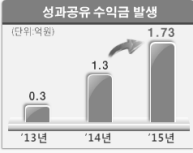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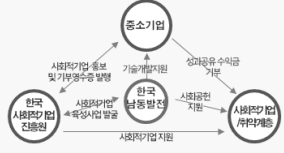
남동발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개선 노력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원료특대 및 구배혁신 기여 **신아일보**

한국남동발전은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판로부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글로벌 신기술 개발촉진과 신제품판로확대에 이바지한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15.11.12. 신아일보)


- R&D 등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2.5%를 남동에 납부
- 수익금을 사회적기업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16.1월)

성과공유 수익금 발생





한국남동발전, 성과공유 수익금 1억3천만원 사 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전달



해외日報
올해는 더 '좋은세상' 만들어 주세요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중소기업과 성과공유를 통해 얻은 수익금 1억 1,30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진주시에 전달했다. 성과공유 협약 맺은 ㈜성일터빈 등 11개사로 부터 예산원감파 기술개발을 통해 얻은 성과 공유금으로 마련했다. ('16.1.22.경남일보)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역경제와 수출에 올인

한국남동발전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산업 진입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수출 우수모델인 수출전문대행회사(G-TOPS)를 발전산업뿐 아니라 타산업군에 확산 및 전파하여 침체된 우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가수출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기술보증기금

08

지역특화산업 R&D 기술의 맞춤형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역특화산업 R&D 기술의 맞춤형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요약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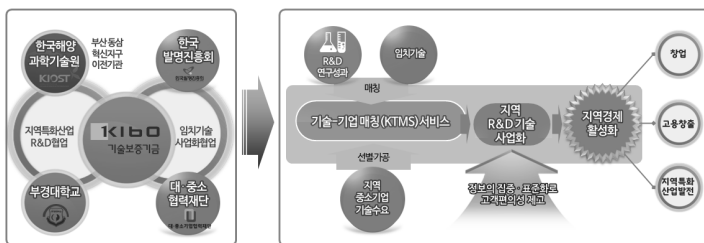
- 기술이전 시 지역 내 기술공급정보의 통합서비스 부재로 기술이전 부진

□ 협업방안

- 지역 내 특화기술의 수요·공급정보 체계화
- 맞춤형 기술 정보 및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 임치기술의 기술가치평가로 금융 활용도 제고

□ 협업효과

- 대고객편의성 제고, 기술-기업매칭 정확도 향상, 성과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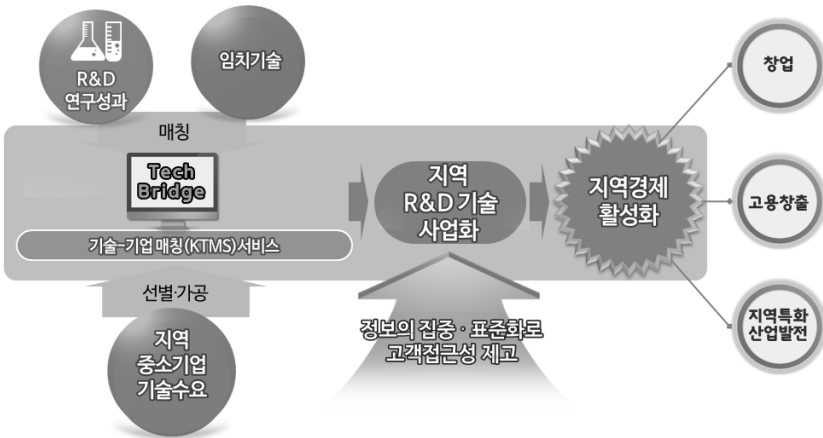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부진한 개방형 혁신 인프라

'14년 지역(부·울·경)내 기보의 기술이전 건수는 54건, 계약건수는 24건으로 전국 이전건수 254건, 계약건수 166건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거래 부진과 거래접점 부족, 기술거래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기술이전을 위해 전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을 찾아야만 했고, 기술이전 전담기관 역시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어 지원을 받기에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보의 기술이전플랫폼, “Tech-Bridge”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날개를 달다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보와 지역공공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한 자리에 모으고 지역기술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기보는 '14년 9월 완성된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체계화하였고 지역의 공공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협업前	협업後
㉠ 기업의 불편 : 기술탐색 시 여러기관 개별 접촉 → 필요한 기술의 탐색에 애로 발생	⇨
㉡ 공공연·대학의 불편 : 수요기업 정보부족 → 자매기업에 편중된 기술이전 → 사업화 성과부진	
	㉠ 기술이전 및 금융 One-Stop 지원 → 대고객편의성 제고
	㉡ 지역특화산업 기술수요DB 체계화 ㉢ 기업기술매칭서비스 정확도 향상 → 성과극대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이번 협업을 통하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술공급정보, 금융지원정보 등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이전부터 기술금융까지 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사업화를 성공할 수 있도록 One-Stop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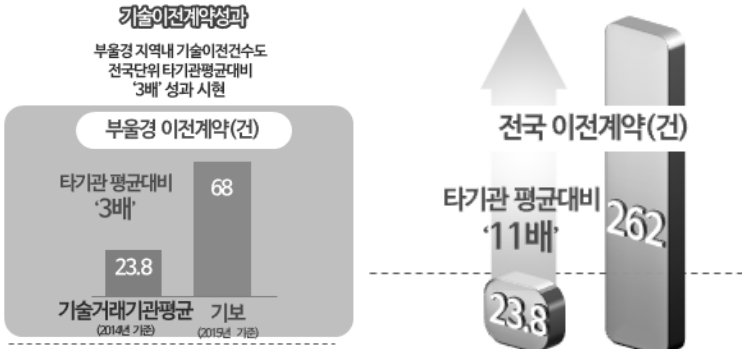
* 온라인 시스템 Tech-Bridge와 전담조직(기술융합센터)의 유기적 결합 시스템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 한 번의 접촉으로 필요한 기술도 찾고, 부족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중심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공공기관 및 기술정보 집중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 성과를 확산시키고 우수 R&D 기술도입 및 사업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기업으로 육성하며 기술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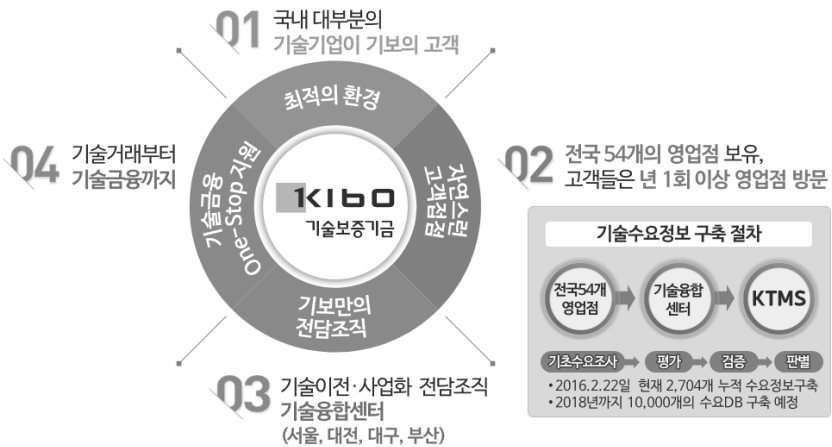
공공연 등의 우수 연구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중하고자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R&D 연구성과정보를 수집¹⁾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보수집·연계를 위해 기술정보 보유기관과 협약²⁾을 강화하여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거래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1) 기술공급정보DB 구축 건 수('16.2.22일 현재) : 290,340건
 2) 업무협약(MOU)체결 기관 수('16.2.22일 현재) : 106개



이러한 기반에 힘입어 기보는 지역내(부산, 울산, 경남)에서 '15년 122건의 기술이전과 68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14년 대비 각각 125.9%, 183.3% 증가된 것으로 타기술거래기관 평균 대비 지역 내 이전계약은 3배, 전국 이전계약은 11배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술수요정보, '기보'만의 강점



주: 기술수요정보DB 누적건수('16.2월말 현재) : 2,704건

기보는 전국에 54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고객들이 기보의 영업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의 전문가인 기보 직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기술융합센터³⁾의 숙련된 기술평가인력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능력을 파악하여 ① 수관된 기술수요내용을 구체화·상세화하고 ② 기술거래 전반의 전문 서비스와 컨설팅, 기술금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매칭시스템(KTMS)을 활용하여 기술-기업을 매칭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고려하여 이전기업을 추천하며, 이후 추가 기술개발 필요시는 산·학 공동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기보는 기술도입부터 기술개발·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기술금융 및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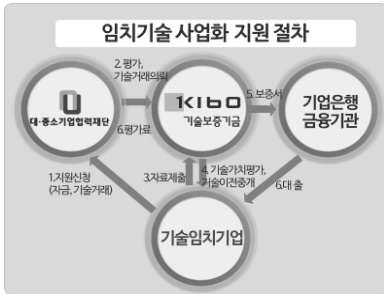
기보는 중소기업 보유 임치기술⁴⁾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자금 조달 및 기술거래 등으로 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임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호만 한다면 금고 속의 돈처럼 이자도 붙지 않는 죽은 돈이 되고 맙니다.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활용범위를 넓혀야 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필요한 기업이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협력재단, 금융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3) 서울·대전('14.1월), 부산·대구('15.7월), 경기·광주('16년 예정)

4)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임치)하는 기업의 핵심기술정보, 기술유출 위험회피, 기업도산의 경우 기술사업화의 안정성 확보 목적



▼ 협업기관별 협업내용

협업기관	협업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평가료지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금융지원

'15년 4분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사업화 자금지원(IP보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임치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시 정보제공 및 추천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다리, 기술보증기금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부·울·경)의 '기술사업화 협업기구'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내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협업기구를 결성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보는 지역의 기업과 기관과의 동반성장을 꿈꾸며 금번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공급권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지원까지 하나로 묶어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넘어 충청, 대구경북, 호남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지역산업 발전의 모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국민불편해소 및 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발전촉진 등 지역경제발전과 기술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사례

'15. 9월. 부산 소재의 해양플랜트 부품업을 영위하는 A사는 중국과의 경쟁과 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적당한 기술을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중국과 경쟁에서 기술우위 확보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였다.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마땅한 기술을 찾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기보의 부산기술융합센터를 만나게 되었고 협업사업으로 구축된 통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협업참여기관인 부경대학교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특수용접기술'을 이전받아 경쟁력 확보에 성공, 기존 대비 최고 300%의 생산성 향상과 평균 15%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이루어냈다.

또한, 이전기술도입에 따라 영업이익률 등의 경영성과 향상, 글로벌 사업수주 확대라는 장기적인 성과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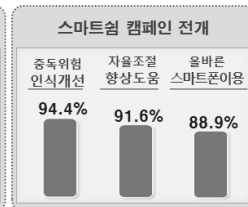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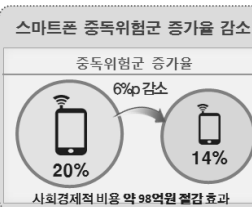
09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요약

□ ‘스마트폰 중독’ 예방-상담-치료 연계로 편리한 상담 제공 및 중독위험군 증가율 완화

- (문제점) 최근 청소년 등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 시설 등이 부족하여 예방 및 상담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한계
- (협업을 통한 불편한 문제해결) 전문 상담기관 간 예방-상담-치료 협력모델 구성
 - 상담 유관기관 간 상담-치료협력(상담의뢰, 연계 등) 등 협력모델 구성
 -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운동 ‘스마트쉼 캠페인’ 공동 전개
 - ‘사이버안심존(App) 모바일 상담기능 개선’,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개발
- (협업효과) 상담수혜자 편의성 향상,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증가율 감소, 예방강화



우리 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상담받고 싶은데 멀리 가기 힘들어...

전남 영광군에 사는 김모씨의 자녀 A양(13세)은 하루 종일 SNS에 빠져 학교생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상담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모씨는 이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상담센터를 수소문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여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김모씨 부부는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으로 멀리있는 상담센터까지 오고 갈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그 때, 여수에 있는 스마트쉼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최근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담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게 되었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상담복지센터에서 스마트폰 중독 진단을 통해 위험수준을 진단받고 매주 1~2회씩 약 4개월간에 걸친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어 사랑스러운 딸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그때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선다고 한다.

“딸을 생각하면 왕복 3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어디든 가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멀리까지 한 주에 몇 번씩 오랫동안 다녀야 할 것을 생각하면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되었어요. 상담은 일정기간 지속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몇 번만 할 수도 없고... 거리가 멀면 상담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딸이 다시 예전의 딸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도 전문 상담기관 수준으로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4개월 동안 전문교육 받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담-치료 연계 협력모델을 통해 전국 46개 전문상담 기관 외에도 278개의 종합상담 시설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학교, 가정 등 일상에서 많은 피해 발생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스마트폰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약 16.3%(잠정치)로 2014년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인구 수로 환산해 보면 약 604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 ('11년) 8.4 → ('13년) 11.8 → ('15년 잠정) 16.3

실제로 학교, 가정, 직장 등 어디서든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개인의 심리, 학업·취업 등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 스마트폰에 빠지기 시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중독위험군의 경우 자칫 가족·친구와 관계가 단절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폭행, 절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느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사용,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하는 것인가? 갈등하는 부모도 있을 정도이니 특정 계층의 문제도 아닌 전 국민의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유관기관 7곳과 함께 손잡고 협업모델을 구성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를 위해 중독 예방교육, 상담,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상담시설을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에 놓였다.

다수의 유관기관 차원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협력, 예방강화 등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아이윌센터, 게임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8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콘텐츠, 노하우 등을 자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목표를 수립하고 협업과제 3건*을 신규 발굴하는 등 중독대응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업과제 발굴〉

- 예방-상담-치료 협력모델 마련
- 정보문화 실천운동 ‘스마트쉼 캠페인’ 공동 전개
- 콘텐츠 공동 활용(사이버안심존 앱(App) 모바일 연계, 콘텐츠 통합 검색 기능 개발 등)



동 협업과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주관기관)이 유관기관(7곳)을 대상으로 협업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역할분담→협업추진→성과점검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특정 시스템 개발이 아닌 일련의 사회문제(스마트폰 중독) 전반을 협업 범위로 보고 추진한 것으로 기관별 참여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8개 유관기관의 주요사업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사전연구를 거쳐 협업가능 분야를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였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 하는 등 예방-상담-치료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토대로 관련 시설 간 상담을 연계하여 스마트폰 중독 관련 상담을 전국 324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46개 시설에서 7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상담이 필요한 중독위험군 및 그 부모, 가족에게는 상담 접근성이 향상되어 보다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가깝고 많은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s - Is To - Be

324개
7배 증가

상담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내담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이동시간, 교통비 절감)

전문상담 시설(46개)

- 스마트쉼센터17개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게임과몰입힐링센터5개 *법정문화재단
- 아이월센터6개 *유아발달센터
-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미디어상담사베치 상담복지센터17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능강화시설(278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94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 거점Wee센터34개 *KIDNE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모바일 상담,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개발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한편,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상담기능 관련 앱(App) 기능을 개선해 모바일 상담서비스 편의를 제고하였다. 스마트폰 이용관리 앱(App)인 '사이버안심존'을 통해 모바일 진단-상담 연계 기능을 개발하였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을 진단하고, 중독위험군으로 진단되는 경우 바로 전문 상담센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기만 하고 그 이후 대안을 제안해주시 못했던 기술서비스의 한계를 상담연계 서비스를 통해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협업기관에서 스마트폰 관련 사이버폭력, 청소년문제, 게임과몰입 예방·해소 등 목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콘텐츠, 교육교재, 가이드북, 상담프로그램

등 콘텐츠(310종)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중독 포털서비스인 ‘스마트쉽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제공하였다.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필요한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콘텐츠 메타정보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것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매체 유형별, 사용목적별, 키워드별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상담에 필요한 강의 자료를 조사해 온 강사, 교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학부모 등이 내 자녀를 위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학습 동영상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천 캠페인, 학교-기업-종교 등 민간으로 확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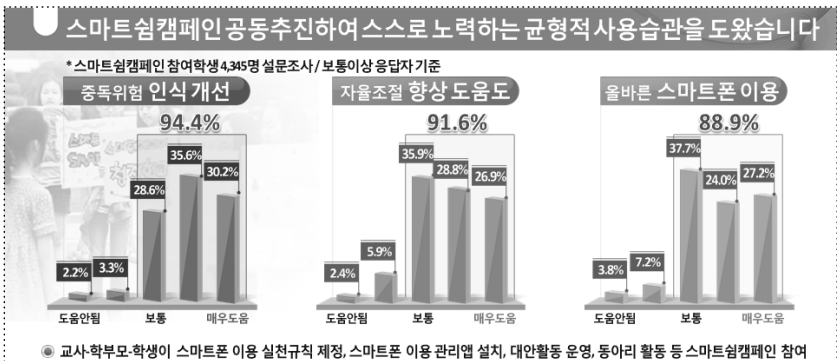
협업과제 중 하나인 캠페인 공동 전개를 위해 협업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다.

기관, 정부, 언론, 시민단체, 통신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범국민 실천운동인 스마트쉽 캠페인을 개최하여 과다사용의 위험성, 중독 대처방안,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스마트쉽 캠페인 선포식’을 합동으로 개최(10.31)한 후 전국 상담센터, 학교,

기업 등에서 캠프, 토크콘서트, 대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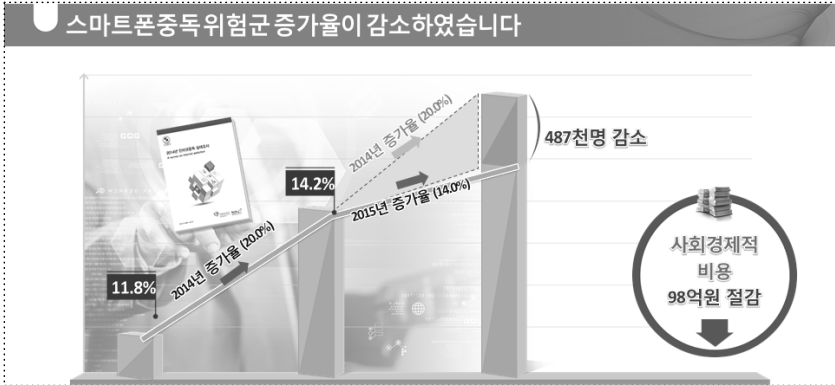
이러한 스마트 실천문화 운동의 전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기업, 종교계 등 민간으로 확대 전개되어 10~12월 2개월간 전국적으로 5만명이 넘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TV·라디오 등 공익광고 500회 이상 실시,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 언론홍보 실시, 서울도시철도 및 대구 지하철 역사 200여 곳에서 광고를 실시하여 전 국민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 계층 협력기반의 캠페인 운영을 통해 스스로의 사용조절 노력을 통한 균형적 사용습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캠페인을 통해 ‘중독위험 인식’, ‘자율조절 향상 도움도’,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90% 수준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협업의 결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증가율이 완화되다.

협업과제(3개)의 추진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증가율’을 전년 대비 6%p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위험군 발생시 상담치유, 치료비 등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할 경우 약 98억원의 비용이 산출되어 비용절감 부분도 협업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이제는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

이번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고민해오던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협업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에 협업모델을 전파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협력모델의 성과 및 파급성을 청소년 사이버폭력, 저작권 침해 등 유사한 사회문제 해결에 협력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종교계, 의료계 등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해 성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 협업기관과의 결속력을 지속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예방-상담-치료 협력모델의 운영 및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스마트폰 속 세상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자신을 위해 ICT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시간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브랜드 컨설팅’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브랜드 컨설팅’

요약

□ 기관 간 전문성 융복합 =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 (문제점) 농식품 기술이전 / 사업화지원 / 금융지원 / 해외판로지원 등 사업별 단절
 - 유망기술 기업에 대한 성장 멘토링, 기술금융지원 연계의 어려움
 - 농식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취약
- (협업방안) 유관기관이 기관이 가장 잘하는 전문분야를 맡아 컨설팅 수행
 - 우수기술·우수브랜드 발굴 → 브랜드육성컨설팅 → 경영전략컨설팅 → 기술가치평가 → 금융지원 기회제공으로 연결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농식품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우수브랜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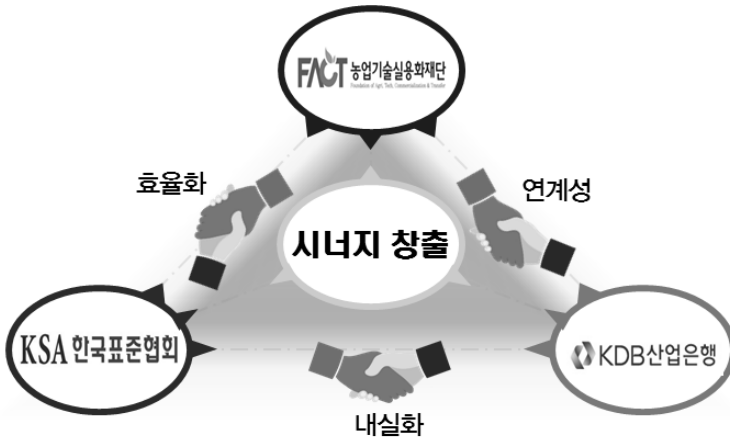


- 협업기관 간 전문성을 융복합하여 글로벌 유망브랜드에 대한 성장멘토링, 투자유치설명회(IR) 및 기술금융 지원
- (협업효과)
 - [사업화 역량 가속화] 건강기능식품사업에 관련 국가기술을 이전하고 글로벌브랜드 개발, IPO 재무전략수립 등 기관 간 협업으로 매출액 300% 상승, '16 코스닥 상장 예약을 하는 Big 성과를 창출함
 - [쌀 소비 촉진, 국민건강 향상] FTA 등 문호개방으로 쌀 의무수입량 급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현미쌀빵 기술이전 및 브랜드 육성으로 양곡 보관비용 5,000억원 절감, 쌀 산업 경쟁력 상승, 밀가루 빵 대체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탄자니아에 기술전수] 탄자니아에 제빵기술 전수로 기아를 돕고 한국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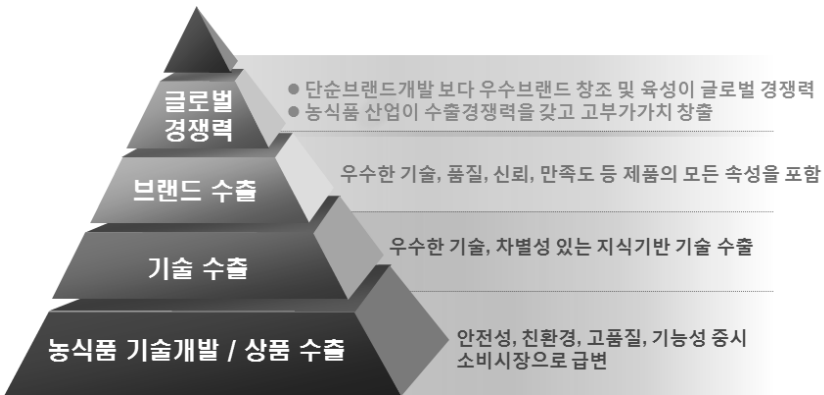
왜 협업인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이전사업, 사업화지원사업, 금융 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소통 및 각 사업별 연계성 없는 단절로 인하여 그 성과 및 효과가 충분치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기술금융 지원이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매우 취약했다. 따라서 식품브랜드컨설팅사업은 농업기술이용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은행의 전문성을 융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우수브랜드를 육성하라

세계 농식품 시장규모는 5조달러로 연평균 4.5%씩 성장하고 있다. 이는 IT, 자동차, 반도체 산업보다 높은 성장률이다. 브랜드컨설팅사업의 목적은 상품수출, 기술수출에서 한 단계 더 고도화 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우수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있다. 브랜드는 우수한 기술, 품질, 신뢰, 만족도 등 제품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속성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였다.



협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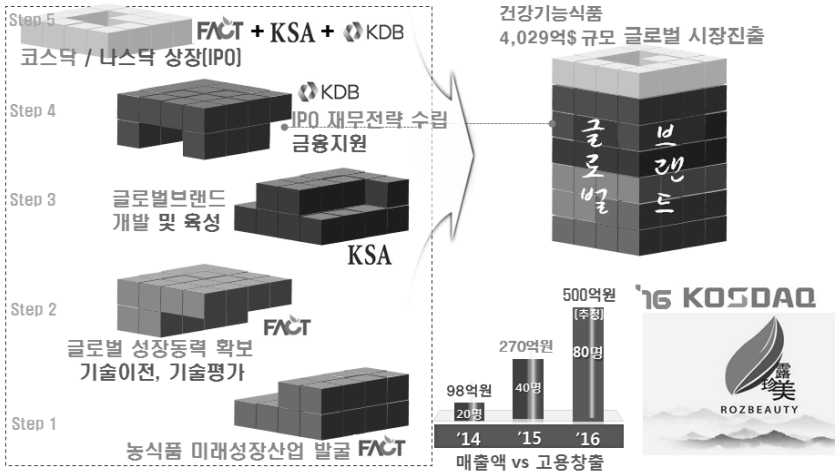
3개 기관 협업은 각 기관이 가장 잘하는 전문분야를 맡아 수행하였다. 주관기관이며 농식품 실용, 사업화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유망 농식품기술 및 업종을 발굴, 기술이전, 기술평가, 투자유치설명회를 담당하고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는 브랜드 육성 및 브랜드 경쟁전략 수립,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는 경영, 재무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기회제공 부문을 각각 담당하여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협업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미래성장 산업화 지원

주요성과 중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산업화 지원이다. 동 사업에 참여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은 브랜드컨설팅을 통해 25건의 기술이전, 글로벌 R&D 및 유통회사와 공동연구협약을 성사시켰다. 아울러 중국 등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지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로진미'라는 글로벌 상표브랜드도 신규 개발하였다. 여기에 브랜드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매출

액은 2014년 대비 300% 상승, 고용창출은 2배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Big성과와 IPO 추진을 위해 경영재무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감소를 통해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예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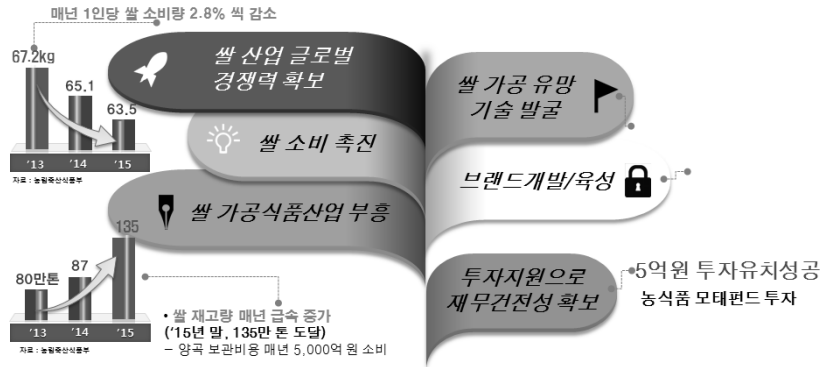


현미쌀밥 시장경쟁력 급성장 원년

두 번째 성과로는 수입 밀가루 빵에 밀려 고전을 하고 있는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 경쟁력 향상이다. 현미쌀빵을 밀가루빵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도록 식감과 풍미, 건강증진 면에서 우등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전하여 5억원 투자유치 성사, 기술이전을 하였다.

수입 밀가루 빵 및 밀가루 가공식품에 밀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8%씩 감소하여 생산된 쌀이 남아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FTA, TPP 등 문호개방에 따라 수입쌀 의무수입량까지 더해져 쌀 재고량은 매년 32%씩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양곡 보관비용은 매년 5,000억원씩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현미쌀빵 프랜차이즈 브랜드 확대를 통해 쌀 가공기술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정책기조에 부응한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쌀 산업 글로벌 경쟁력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까지 제빵기술을 무상전수하여 기아를 돕고 한국을 알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라팜' 브랜드가 전국확산 및 글로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브랜드 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



전통장류제품을 6차산업화(체험관광)로 육성

세 번째 성과는 전통장류제품을 체험관광 6차산업과 연계한 브랜드의 육성이다. 전통장류제품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도록 4건의 기술이전 추진,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전통장류제품의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6차산업 경영전략 수립과 함께 증장기 실행로드맵을 협업 지원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이 많이 부족하다. 협업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전통장류제품을 6차산업과 연계하여 브랜드를 고급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제품차별화로 전통장류기술에 식품기능성을 가미해 옷 된장 기술과 속성장 제조 국가기술을 이전 계획이다.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문화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증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문화상품이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향후계획

2017년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지방이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기관과 업무협약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농식품기업과 상생협력하여 지역브랜드를 전국 그리고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11

장애등급 걱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요약

□ 운전 적성검사의 정보를 활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 (문제점) 보조금 부정수급 지속 발생으로 복지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조
- (협업방안)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대상자의 운전 적성검사 정보를 공유, 보조금 지급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적발 등 정보 활용
- (협업효과) 보조금 약 20억원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누수 차단 효과 창출



시력으로 2012년 12월 OOOO공단의 보조금 수급권자가 된 A씨, 그러나 A씨는 2013년 8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유지가 가능한 양안 0.5 이상 시력으로 확인되어 적성검사에 통과하였다.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시력인 경우 보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 활발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7%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었다. 언론은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복지급여를 포함한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정상적 정상화” 10대 과제 중 하나로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을 내세워 부정수급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한편 2015년, 국가 및 공공기관 전반에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정착과 공공기관 우수 협업과제 발굴 등 협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모범 사례들을 접하며, 우리는 도로 교통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로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업무와 대내 역량을 중심으로 공단이 수행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대국민 적용 범위가 넓은 운전적성검사 정보를 활용한 협업과제 도출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6개 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특히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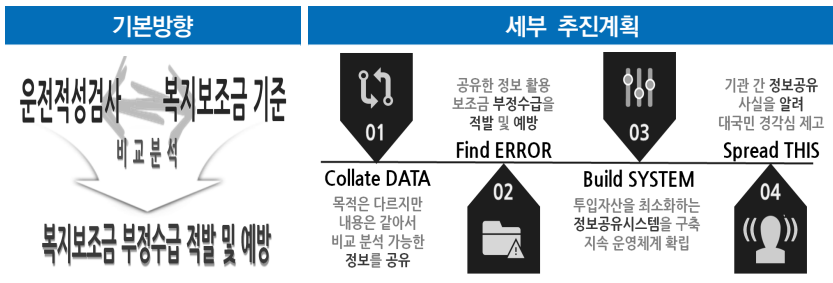
운전 적성검사에서는 신체장애가 심할수록 운전을 제한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장애연금과 같은 보조금에서는 신체장애가 심할수록 수급액이 커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복지 보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지급 기관에는 자신의 신체장애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는 자신의 장애를 비교적 정확하게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전면허를 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국민 적용범위가 넓어 신체장애를 근거로 한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적성검사 정보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신개념 정보공유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공통 정보를 보유한 기관 간 정보를 공유, 비교분석하여 부정수급 근절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시스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운전면허 관리와 보조금 지급액 결정이라는 수집 목적은 달라도 신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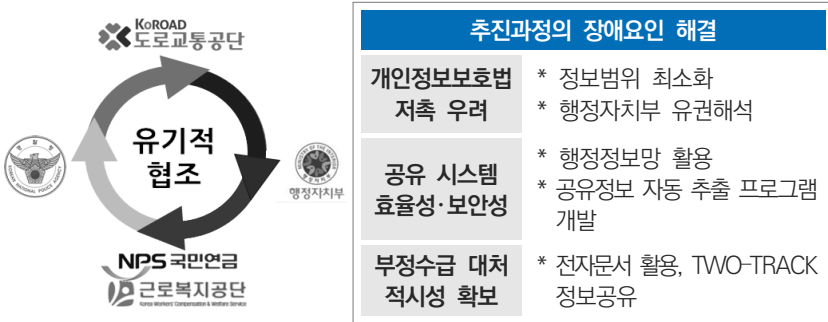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같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의 운전 적성검사 결과 정보와 대상자가 해당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비교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립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부정수급을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장애요인 해결로 합리적인 정보공유체계 마련

공단은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경찰청, 행정자치부와 함께 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적하에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수많은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기관 협의하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의 공유범위를 도출하고, 적성검사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정보공유의 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최적의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구축비용, 인력, 시간 소모가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각 기관이 기관 맞춤형 정보를 추출·제공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적시 대처를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전자문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형식에 치중하지 않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실현했다.



보조금 약 20억원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기여

2015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총 365명의 적성검사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총 884명의 적성검사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357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자 8명을 선별하였고,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2015년 7월 이후 총 645건의 산재 보험급여 지급 재심사 시 사전에 부정수급 신청 여부를 인지하는 등 적정한 보험급여 지급에 운전 적성검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억원의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협업 효과

* 부정수급 의심자 8명 적발에 따라 부당 지급될 뻔한 복지보조금 12억원 누수 방지 효과
 8명(부정수급 의심자) * 430,420원(월 평균 장애연금 수급액) * 354.6개월(평균 잔여연금 수급기간) = 12억원

대표 사례



1급 장애연금 수급자 A씨, 시력 진단이 포함된 적성검사에 통과(운전면허 유지)

운전적성검사 정보 공유로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A씨의 시력이 장애등급과 불일치한다는 사실 인지, 즉시 부정수급 조사 착수하여 부당한 장애연금 지급 방지

* 산재급여 재심사 필요정보 제공을 통해 8억원 상당의 지급 적정성 확인 효과

645건(산재급여 재심사 수) * 1,251,201원(1건당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 = 8억원

대표 사례



산재 1급 8호(양 하지 사용 불가)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B씨지만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실시한 운전적성검사서에서 B씨가 다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수급자 B씨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

시스템 보완 및 적용범위 확대로 건전한 복지문화 정착에 일조

운전 적성검사 정보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통해 우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선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기관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나 직권조사 없이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적발할 수 있게 되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거나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 조치한다는 사실은 국민 체감 효과가 크므로 부정 수급이 범죄 행위라는 국민 의식 전환을 통해 사회 전반에 올바른 수급문화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는 이제 시작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 운전 적성검사 정보 활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공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며, 특히 관련 기관들이 부정수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체장애를 근거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로 협업 범위를 확대해 사회 전반에 건전한 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관리체계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관리체계 운영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연금공단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역할 분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 (문제점)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언론보도 등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폭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활용률 저조
 - ※ 모니터링 기관 대비 약 26% 활용('14년 147개소 모니터링, 38개소 점검)
- (협업방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이상결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역할 분리
 -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 이상결제 모니터링 정보제공 및 현장점검 기법 등 노하우 전수
 - (국민연금공단)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각 시도 지역본부 조직을 활용하여 현장점검 수행 및 점검결과 관리
- (협업효과) 장애인활동지원 결제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바우처 부정사용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모니터링 결과제공 현황

구분	정보제공 시설 (개소)	이상결제(건)				합 계	
		심야결제	일괄결제	중복결제	학교수업 시간결제	건	금액(원)
합계	55	63	1,643	138	2,800	4,644	191,057,162

국민연금공단은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각 시도 지역본부 조직을 활용하여 현장점검(55개소)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 원은 현장점검 지원(7개소)을 통해 조사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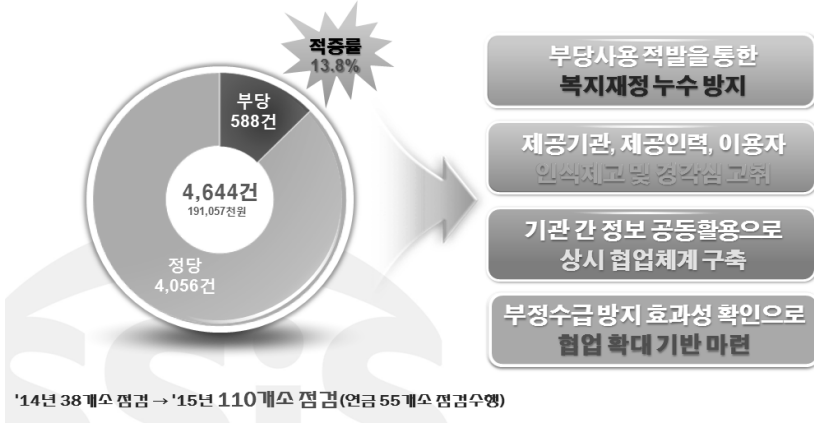


파급효과

이번 협력으로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원 결제 건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여 바우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총 4,644건(191,057천원) 중 588건(26,376천원)을 적발(13.8%)하였다. 둘째,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제공인력 및 사용자 등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셋째, 유관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장점검 적발현황			
구분	기관수(개소)	적발(건)	결제금액(원)
결제원칙 위반	28	492	22,323,560
제공기록 관리 위반	3	26	1,008,710
초과청구	5	16	748,850
카드(정보)소지	9	32	1,352,300
허위청구	3	22	942,670
합계	48	588	26,376,090

“588건 26,376천원 부당확인”



기 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상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복지부 현장 점검 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점검 지원

※ '14년 점검기관 수 38개소

개 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상결제 모니터링 수행 후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공유

※ '15년 점검 기관수 110개소(국민연금 55개소)

과제 보완

사회보장정보원은 노인장기요양정보(건보공단), 장기입원환자정보(심평원) 등 공적정보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유효성 높은 이상결제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금번 협업과제의 보완점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기적인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협업 시너지를 제고할 것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별 행정처분과의 연계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사회보장정보원은 향후에 '16년 협업 추진계획 수립('16년 3월)하고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과 현장점검('16년 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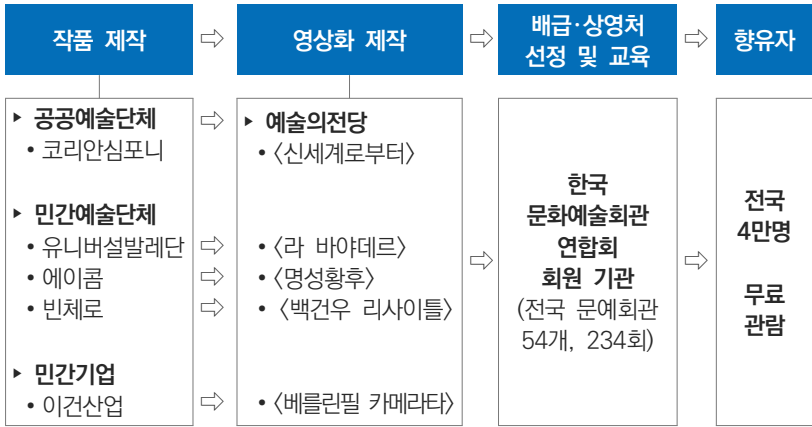
13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 사업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 사업

요약

□ 예술의전당 공연을 고화질로 영상화하여 전국 문화예술회관으로 무료 배급

- (문제점)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시간적, 거리적 제약 및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향유 인구가 한정적이며, 우수 콘텐츠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지방 간 문화격차 발생함
- (협업방안)
 - 배급협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전국 문예회관으로 무료 배급
 - 제작협업 : '15년 영상화작품의 83%인 5개를 공공·민간예술단체 및 기업과 협업으로 제작 (뮤지컬 <명성황후>, 발레 <라 바야데르>, 클래식 음악 <베를린 필 카메라타>, <백건우 리사이틀>, <신세계로부터>)
- (협업효과)
 - (배급협업) '15년 영상화작품 관람인원의 63%(40,516명)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의 배급망을 통해 무료 관람. 회원 기관 중 상영을 희망한 문예회관에게 기회 제공. 관람객 편의를 제고하는 부대행사(교육 등)를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진행 전반의 효율성을 높임
 - (제작협업) 법적 이슈사항(작품 저작권, 출연진 초상권 등)을 예술단체 및 기업과 통합계약으로 해결. 비용절감(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상권료, 전문가 자문료, 촬영료 등).



사업소개

2013년 5월부터 시행한 <공연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은 우수 공연과 전시를 고화질 영상물로 제작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무료로 배급하는 공익사업이다. 오페라, 발레, 뮤지컬, 클래식음악, 현대무용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장르를 대중과 친밀한 형태인 영화로 제작하여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10대 이상의 4K 카메라가 다양한 앵글로 잡아내며,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 리허설 장면도 담아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두 번 공연으로 끝나는 작품을 높은 화질의 영상물로 보존하여 콘텐츠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긍정적 효과도 지닌다.

▼ [그림 1]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내 공연영상화사업 소개



협업 추진배경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이 'Met Opera Live in HD'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공연영상화사업은 국내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딛었으나, 시행 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선 작품의 저작권 확보가 문제였다. 무대에 일회성으로 올려지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으므로 영상 제작 및 상영에 필요한 저작권을 별도로 갖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체제작·기획하는 클래식 음악회인 <11시 콘서트>의 경우에도 지휘자와 협연자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단원 80여 명의 초상권 문제 등이 제기되어 난항을 겪다가 초상권에 관한 부가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단락되었다. 매년 국립발레단과 공동 주최하는 예술의전당 대표 프로그램인 <호두까기 인형>도 발레단과 연주단체 이외에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와 개별적으로 저작권 추가 협약을 맺어야 했다.

상영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소외지역에서의 상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의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했다. 이후, 관심을 보인 몇몇 문예회관 및 지자체와 여러 차례의 협의 후 배급 및 상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상영을 확정된 후에도 각 현장의 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테스트를 위하여 5명의 부서원들은 전국을 돌아다녔다.

▼ '13~'14년 협약체결 문예회관

No	구 분	기 관 명
1	문예회관	천안예술의전당
2	문예회관	(재)하남문화재단
3	문예회관	(재)안양문화예술재단
4	문예회관	부산문화회관
5	문예회관	(재)GS칼텍스 예올마루
6	문예회관	연천수레울아트홀
7	문예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8	문예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9	지자체	서귀포시
10	문예회관	수성아트피아
11	문예회관	영화의전당
12	지자체	울릉군
13	문예회관	인제군문화재단

▼ '14년 상영 문예회관 및 관람인원

No	지역	기 관 명	관람인원 (명)
1		광주시문화스푸츠센터	776
2	경기	연천수레울아트홀	1,413
3		구리아트홀	428
4	강원	삼척문화예술회관	418
5	전라	영광예술의전당	550
6		순천문화예술회관	870
7	경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577
8		울릉군민회관	200
9	충청	세종시정부청사관리소	551
10		태안군 문화체육센터	760
11	대구	수성아트피아	420
12	부산	영화의전당	1,461
13		금정문화회관	1,169
14		영도문화예술회관	255
15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1,072
총 계			10,920

협업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3년차이자, 국고(10억원) 지원 첫 해인 2015년부터 예술의전당은 본격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배급을 위하여, 전국 200여개 문화예술회관이 소속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손을 잡았다.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공연영상화사업>을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모하였고, 영상, 음향, 스크린, 객석 등 제반 상영환경을 고려하여 상영기관을 선정하였다. 홍보와 접수, 선정, 교육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더불어 전년도에 비하여 상영처가 3.5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예술 프로그램 부족으로 공연장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던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은 월등하게 높아졌고,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진 우수 콘텐츠를 무료로 관람함으로써 문화적 갈증에

목말라했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의 배급협업을 통해 2015년에는 총 54개 문예회관에서 234회 상영하였으며, 40,516명이 관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상영처 39개 추가, 상영횟수 177회 증가, 관람인원은 4배 이상이 늘어난 결과이다. 또한 2015년 총 상영횟수 391회의 60%, 총 관람인원 64,680명의 63%를 차지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 배급협업 전후 상영처·상영횟수·관람인원 변화

2014년 (협업 전)		2015년 (협업 후)		증감내역	
상영처 / 횟수	관람인원	상영처 / 횟수	관람인원	상영처/횟수	관람인원
15곳 / 57회	10,920명	54곳 / 234회	40,516명	+39곳 / +177회	+ 29,596명

▼ 태백문화예술회관 상영 현장사진(2015.8.26)



제작 부문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제작 작품 총 6개 중 83%인 5개를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까지 총 10개의 작품을 영상화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권 확보 및 출연배우들의 초상권 비용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뮤지컬 장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춰 국내 뮤지컬 사상 최초로 20주년을 맞은 <명성황후>를 에이컴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영상화하였다. 저작권 협의 시, 연출 및 음악 등 작품의 저작권 외에도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포함하여 한번의 계약으로 모든 법적 이슈사항을 일괄로 처리하였다. 다만, 대도시를 제외한 문화소외지역에서만 상영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사용이용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뮤지컬 <명성황후>를 영상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민간 공연기획사인 빈체로와의 협업을 통하여 명품 클래식 음악회인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제작을 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신세계로부터>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 및 후 편집 시에 여러 차례 진행되는 전문가 자문을 협업기관의 상임 예술감독에게 직접 받아 자문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 '15년 제작협업 작품

영상화 작품 포스터					
장르	클래식음악	뮤지컬	클래식음악	클래식음악	발레
촬영일	7.4	8.24	9.20	9.22	10.26
작품명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명성황후	신세계로부터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라 바야데르
협업기관	이건산업	에이컴 인터내셔널	코리안심포니	빈체로	유니버설 발레단

세계 최정상 실내악단인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의 제작은 이건설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협업에 참여하여, 촬영비 일체 및 저작권, 초상권료 등이 제작비용으로 추가되지 않았다. 예술의전당은 후 편집 비용만 지불하여 2015년 제작 작품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첫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을 영상화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향후 발전계획

국내 대표 아트센터이자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은 <공연영상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궁무진한 협업의 기회와 발전 범위를 확인하게 되었다. 우선 2015년 3월 재외문화원장 회의에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한 것을 계기로 해외홍보문화원과 협업하여 5월에 재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8개국(미국, 태국, 터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카자흐스탄)에서 총 27회 상영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한국어학과와의 협업을 계획 중이며, 해외 영화제 및 페스티벌의 참가 기회도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공연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공연단체와 예술가들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클래식 한류를 조성하는 등 문화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상영 준비 중이다. 더불어 기 제작한 영상물을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용 버전으로 별도 편집하여, 전국 학교에 일괄 배급하여 수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업도 추진 중이다. 경험하기 전에는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험재인 ‘공연예술’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연영상화사업>이 가진 여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연 영상 관람을 통해 감동과 만족감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평소에 찾지 않았던 가까운 문예회관을 찾게 될 것이며, 이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공연예술시장 규모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 '15년 언론 보도 이미지



7.25 MBC “스크린에서 만나는 공연 무대...”



오pera,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의 무대 예술이 영화의 형식을 빌려 관객을 갖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극장 스크린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무대예술 제공자들의 전략과 줄 댄 다양한 문명소를 선보이겠다는 극장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전당이 '빅 온 스크린(SAC on SCREEN)'이라는 이름의 영상화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발레 극' '홀로끼기 인형'을 시작으로 8월 현재까지 현대무용,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예술 13편을 영상화했으며 하반기 하반기 추가 제작을 계획 중이다. 상업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중 유료 상영을 희망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문화재단과 학교, 군부대, 예술 영화관, 해외 문화원 등본 통해 주로 소개와 있지만 앞으로는 CGV 등 대형 영화관에서도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예술의 전당 측의 설명이다.

8.5 서울경제 “무대예술, 스크린 속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석유공사

14 지역특성을 활용한 석유산업발전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성을 활용한 석유산업발전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네트워크 협업으로 창조적 석유도시 울산을
나아가 우리나라 석유산업 발전을 도모하다! -

요약

□ 자발적, 전문적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해 위기에 빠진
울산시와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 (문제점) 경제규모에 비해 정체된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저유가 및 자원개발
이유로 위기직면, 석유시설이 밀집된 울산지역의 역내 실질적 협력체계 부재
- (협업방안) 참여기관별 특징점 및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하여 석유산업발전
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수행
- (협업효과) 석유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시, 지역인재
양성 및 석유기업의 역량 강화 도모, 미래 확장가능한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석유산업연구회' 발족 등)



왜 우리는 싱가포르, 휴스턴, 에버딘, 암스테르담처럼 될 수 없지?

울산 지역에는 석유비축기지, 동해가스전, 정유공장, 오일허브 등 상·하류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석유시설들이 총 망라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울산을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석유도시라고 부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정제, 판매 등 하류부문 위주로만 인식되고 있고, 또한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는데다가 최근 저유가 등 시장여건 악화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저유가, 석유개발 비판론, 사양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석유산업과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전통제조업의 한계에 봉착한 울산 경제는 신기하게도 닳아있다. 특히나 석유시설이 밀집된 울산지역에 실질적 역내 협력체제는 전무했다. 석유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울산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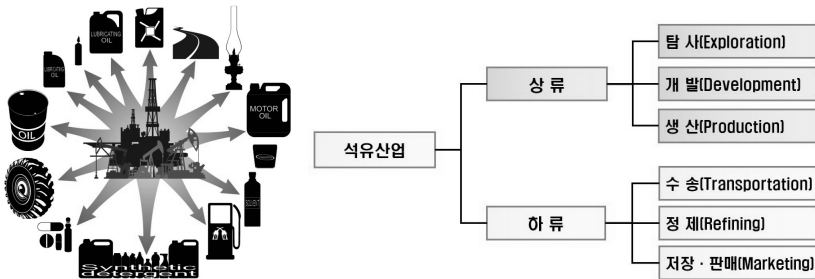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석유산업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지방혁신도시인 울산으로 이전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12월 개청식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진입시킨 울산에서 석유개발의 성공신화를 이어나가겠다’며 ‘명실 상부한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공사는 울산 이전과 함께 200여명의 지역인력을 채용한 데 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협약을 맺고 석유산업분야에 대한 산학연계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2015년 5월에 개청식을 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울산과 함께 국가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추핵으로 역할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 10위권 에너지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

‘각자도생’보다는 협업을!

전 세계에서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석유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석유산업이라 하면 다들 SK, GS, S-OIL 같은 ‘정유사’를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석유산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지하에 부존해 있는 석유를 개발 및 생산하는 상류(Upstream), 석유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분야인 중류(Midstream),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석유 화학제품을 만드는 하류(Downstream)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석유산업은 하류부문만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스나 전력산업에 비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및 중요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의 참여자들은 각각 상류, 하류를 주장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석유산업 구조와 다양한 연관 산업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지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회사 순위로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석유회사인 만큼 석유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땅속 깊숙이 묻혀 있는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석유개발은 자체로서 대규모 산업을 구성하고 있지만, 주변의 다른 산업인 토목, 플랜트, 공학설계, 제철, 조선, 화력발전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 성장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석유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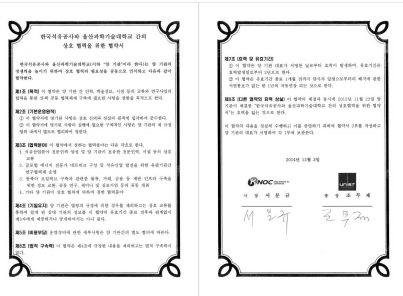
축으로 삼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2010년 초반에 정부를 중심으로 석유산업과 관련된 연구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상황 때문에 민간중심의 자생적 석유산업 연구협력 네트워크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회, 포럼 등이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석유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경제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 정부는 정책 입안 검토 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석유산업연구회’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디디어 울산지역 산·학·연 전문기관 ‘석유산업연구회’ 발족!

▶ 에너지경제연구원, UNIST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울산 지역에 위치한 석유산업 산학연 기관들 간 체결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석유산업연구회 발족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대표 대학인 울산대 역시 동참할 의사를 피력해왔다. 각 기관이 보유한 공유자원을 조사하고 협업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면서 석유산업연구회의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 공유 및 전파를 위해 사무국은 학계인 울산과기

원의 기술경영대학원 글로벌에너지트레이딩센터에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이 각출한 운영재원을 모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구회의 단계별 확대방안 및 참여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한국석유공사	UNIST/울산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장점	개발, 비축	오일허브, 인프라	시장(정제, 유통)
중요 공유자원	석유정보, 전문기술	인력양성, 산학협력 시스템	정책연구, 공신력

연구협력 구축방안 협의과정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도 석유산업 연구방향 및 공동연구과제 2건을 선정하였다. ‘울산지역 석유산업 중장기발전방안’과 ‘북미서부로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관련 전망’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에 열린 중간, 최종보고회에서는 석유산업연구회 참여기관 소속회원이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공동연구결과의 객관적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 석유도시들의 성공사례로 배우자!

상기 공동연구 수행과정에서 해외 글로벌 석유도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국제 석유도시 중 특히 싱가포르를 정부 주도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아시아 석유물류 중심기지 구축이라는 목표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오일 허브도 지리적 이점과 정제 및 저장시설 등 물리적 기반을 보유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싱가포르와 울산시 전경



그러나 싱가포르가 개방구조로 거래(실물), 가격형성(정보)이 활발하고 투명한 반면 한국은 거래 및 가격 모두에서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혀 석유가 생산되지 않지만 아시아 석유거래 중심역할을 통해 석유도 원활히 확보하면서 가격설정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석유산업 중심의 정책일환으로 세금을 유예하고 주류산업단지 운영담당 공기업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산학공동으로 위원회를 설립(1992년)하고 Contact Singapore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등 오일 허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했다. 미국의 휴스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등 다른 석유도시의 성공요인들을 통해서도 울산이 석유도시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을 글로벌 석유산업 도시로!

석유산업연구회 시범공동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울산지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서는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2040년까지 약 11조 9,7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오일 허브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는 2조 1,865억원, 오일 허브 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9조 7,848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오일허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울산 지역 내 2040년까지 88,954명의 고용창출효과까지 계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석유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울산지역 발전, 우리나라 석유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울산과학기술원 국제에너지트레이딩 연구센터 산하 석유산업연구회는 2016년 1월 울산시와 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2021년까지 동북아 오일 허브 석유거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시는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학연 에너지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석유산업연구회는 공동연구 수행, 석유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략적 석유상품 발굴 연구, 한국형 기준가격 체계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공동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석유산업연구회 이름으로 전파하고 참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수행할 공동과제로는 저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석유산업의 미래, 우리나라 석유안보지수 및 석유 개발/비축사업 기여도 등이 있다.

창조적 석유도시 울산에서 산학연 네트워크 협업 활동을 통해 동북아 오일 허브를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안정적 석유공급뿐 아니라 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석유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석유산업연구회의 당찬 포부이다. 이제 첫걸음을 떤 연구협력체로서 앞으로의 꾸준하고 일관된 활동을 기대해 본다.

한국공항공사

15 항공-관광 협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항공-관광 협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요약

- **(문제점)** 지방공항의 항공관광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공항의 운항노선이 적고, 일부공항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협업방안)** 정부, 항공, 관광, 학계 등 민관합동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체 구성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36개 관광상품 개발
 - 개발된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활동(트래블마트 참가 등)
 - 국제선 전세편 유치 추진
 - 지방공항 취항유도를 위한 정부(국토부, 법무부) 공사, 지자체의 정책지원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접근교통망 대폭 확충
- **(협업효과)**
 - 메르스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에 대하여 공동 대응, 최단기간 내 극복
 - '14년 대비 지방공항 항공여객 성장 및 적자 감소 (항공여객 25.4% 증가, 적자규모 23억원 감소)

- 지방공항 여객터미널 활용도 증가(26.6%→31.2%)
- 지방공항 운수권 확보, 환승무비자제도 확대 시행
- 공사 및 지자체의 여행사/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 연계교통망 노선 신설, 증편, 스케줄 조정

지방 사람은 비행기 타면 안되나요?

대구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5세 오씨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거래처를 수시로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와 오사카를 잇는 항공노선은 대구국제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던 때의 기억만이 희미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이후로 오씨가 한창 사업을 하던 시기에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오씨는 일본출장이 있을 때마다 새벽 같이 일어나 김해국제공항이 있는 부산까지 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했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출장을 앞두면 한숨부터 나오던 오씨는 어느 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가 하루 2번 대구-오사카 노선을 운항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해서 대구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니, 평소 반나절을 잡아야 했던 이동시간이 편도 한시간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거래처를 만나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유령공항이라 불리던 지방국제공항에 활력을

전국 각지에 14개 공항, 그중에서 국제공항이 7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오씨와 같은 공항이용객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른 새벽 혹은 출국 전날 미리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등 국제노선이 많이 취항하고 있는 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방공항의 항공운항 스케줄이 유연하지 않고, 편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KTX 등 육상교통수단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하여 제주노선을 제외한 내륙노선의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은 목적지의 9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아무런 대책 없이 항공사에 지방공항 노선확대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몇 년 전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을 뽑는다면 한국의 양양공항이 유력한 후보이며, 유명공항으로 불리고 있다”는 보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정부기관, 지자체, 관광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실효성 있는 공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항공-관광 활성화 어벤저스 출범

독자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공항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난해(15. 2월)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관광 협업을 위해 정부, 항공, 관광, 학계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각 기관의 노하우와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체 구성

**항공-관광협업을 위해 정부, 항공, 관광, 학계 등
민관합동 협업 네트워크 구축 (15. 2~)**

국토부,
문체부

13개
지자체

공항공사
관광공사

8개
항공사

여행업
협회 등

미션

- ✓ 질 높은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 ✓ 관광산업 육성에 적합한 항공노선 확충 및 취항유도 정책지원
- ✓ 착륙시부터 관광후 출국시까지 모든과정에서의 고객만족도 제고
- ✓ 적절한 가격의 유지
- ✓ 공항 접근교통 개선 및 항공운임 할인행사 등

‘공항 마케팅’에서 ‘도시 마케팅’으로 :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우유의 경우 ‘우유는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활용하여 ‘서울우유’라는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감하고 있는 ‘우유’ 자체에 대한 소비 촉진을 소구하는 광고를 시행한 적이 있다. 자사 브랜드 홍보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브랜드 수요를 늘리고자 한 시도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한국공항공사는 지방에 소재한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이 있는 ‘도시’를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황분석(공항공사, 관광공사, 항공사, 지자체), 전문가 자문(여행업협회, 국토부, 문체부, 문화관광연구원), 상품개발 및 검증(여행사, 대학교,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 및 자료들은 유관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고, 덕분에 지난해 11월,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지방도시별 특색을 반영한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같이의 가치, 함께 추진하는 항공-관광 활성화

이렇게 개발된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는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 주관한 B2B 관광 교역전(트래블 마트)에 지자체와 함께 참가하여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 및 공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직접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트래블 마트는 당국 여행업계에서 약 1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에게서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 中,日대상 트래블 마트 참석, '16.1월~2월



한-중 트래블 마트



한-일 트래블 마트



두 번째로, 개발된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을 활용하여 지방공항(대구, 청주, 양양, 무안) 국제선 전세편을 취항할 경우, 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동 인센티브는 전세편을 시작으로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국제선 정기편을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광상품과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방공항 실무자들이 공동 해외 프로모션을 실시하거나 해외여행사 및 항공사를 직접 국내로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지자체 공동 중국, 일본 현지 여행사 및 항공사 대상 마케팅, '15.11월~



대구공항-(中)제남 프로모션



청주공항-(日)오사카 프로모션

세 번째로, 항공사의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데 정부기관(국토부, 법무부), 한국공항공사, 지자체는 주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 운수권 확보, 신규취항 및 증편 인센티브 확대, 환승무비자제도 확대 시행, 지자체 지원조례 신설, 기관 간 MOU 체결 등 어느 해보다 조화롭게 공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 항공사 지방공항 취항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

구 분	추진 실적
1 운수권 배분 (국토부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항공회담을 통한 지방공항 노선 추가 확보(1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우시, 양양~선양, 무안~하얼빈, 청주~닝보 (각 주3회)
2 신규취항/증편 인센티브 확대 (국토부·항공사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항(대구, 청주, 양양, 무안) 취항항공사 인센티브 지급(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항) (1~3년) 100%, 50%, 30% → 3년간 100% - (증편) (1~3년) 50%, 30%, 20% → 100%, 50%, 30%
3 환승무비자제도 확대 시행(법무부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인 국내 무비자 허용(1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방문 급증 중국인의 국내방문 유도 목적
4 공항활성화 지원조례 신설(지자체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15.7.28), 청주시(15.10.8)
5 운항지원 MOU 체결 (지자체·항공사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개설 및 운항지원(50인승 소형항공기 포함)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타항공(15.9.7),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15.11.20)

네 번째로, 외래관광객이 지방공항에 도착했을 때 편리하게 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항접근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공항공사는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와 함께 지방공항 대중교통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5개 공항에 20개 노선이 신설되고, 4개 공항 10개 노선에 일108회 대중교통노선이 증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차와 막차의 운항스케줄이 항공기 운항스케줄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등 지방공항-도심 연계교통망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항공·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여 역대 최고 여객수송실적이 예상되고, 몇몇 지방공항은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던 시기인 2015년 5월 대한민국은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다. 중국노선 점유율이 높았던 지방공항 국제노선은 대부분의 운항편이 취소되었고, 그 영향으로 6월 외국인 입국자가 41.0% 감소하여 외국인으로 북적거리던 서울 명동과 제주도가 텅 비는 등 항공·관광분야는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체가 3차례 긴급소집되었고, 공항 열감지기 제공(지자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및 홍보(공항공사, 면세점), 해외여행사·언론사 초청 및 후원(공항공사, 관광공사), 국내외 여행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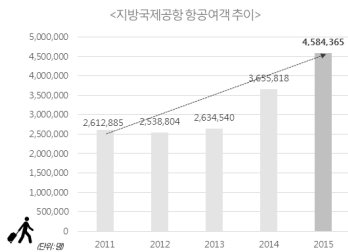
대상으로 공항 내 공동 프로모션 실시(공항공사, 관광공사, 지자체), 운항중단 항공노선의 신속한 복항추진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국토부, 공항공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대비 12.6% 상승한 6,936만명을 기록하였다.

* 인천제외, 출+도착, '15년 1~12월 누적집계(출처: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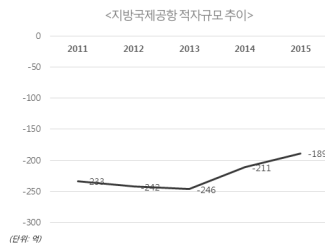
다양한 기관이 함께 가꾼 항공-관광 활성화의 열매

민관합동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 운영,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 개발, 개발된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국제선 전세편 유치 추진, 항공사 지방공항 취항유도를 위한 정책마련, 공항접근교통망 확충 등은 혼자 힘으로는 하기 힘들었을 활성화 대책들이었으며,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와 높은 호응 덕분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안들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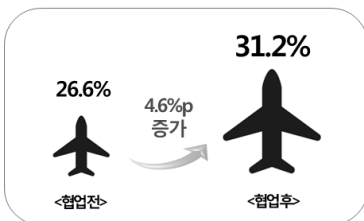
✎ **항공여객**
: (14) 3,655,818명 → (15) 4,584,365명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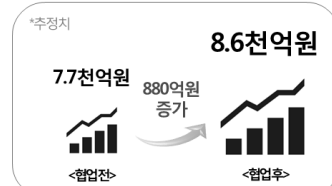
✎ **적자규모**
: (14) △211억 → (15) △189억 (23억 ↓)



✎ **여객터미널 활용도 증가**



✎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14년 국내관광 유커 생산유발액 일인당 약 300만원 (8,034,257원)

그 결과, 2015년 지방국제공항 여객수송실적은 전년 대비 25.4% 증가한 458만명이었고, 청주, 대구, 무안국제공항은 역대 최고 여객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과 항공편이 늘어남에 따라,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지방국제공항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나 대구공항과 청주공항의 적자규모는 2014년 △61억원에서 2015년 △15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함께 가는 항공-관광 활성화의 미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추진했던 2015년 항공-관광 활성화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에도 공항활성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추가적인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다양한 유관기관이 유기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업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Connectivity Forum을 개최하여 항공 및 관광 분야별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 개발했던 항공-관광 연계 관광상품은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상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국제 박람회, 해외공항과의 프로모션, 항공사의 안정적인 지방공항 취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항공-관광 활성화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장학재단

1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 추진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ICCRS) 추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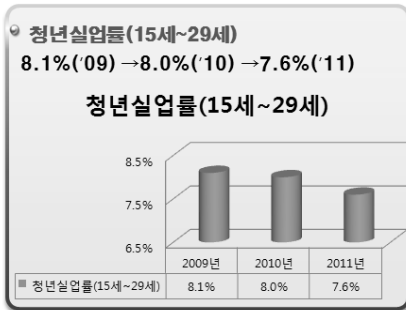
□ 취업과 신용회복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문제점) 청년실업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능력 저하로 신용유역자의 지속적인 증가
- (협업방안)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기관 또는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 *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
 - (한국장학재단) 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신용회복지원
 - (협약기관) 일자리 및 직무교육 제공
- (협업효과) 청년일자리제공, 학자금대출 건전성 제고 및 경제적 재기
 - (청년일자리 제공)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
 - (학자금대출 건전성 제고) 상환능력제고로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발생 억제
 - (경제적 재기) 상환능력 저하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학생들의 경제적 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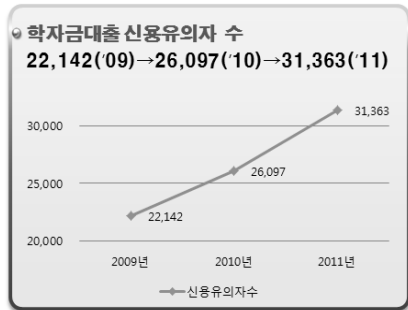
청년실업으로 인한 신용유의자 지속적인 증가, 취업과 신용회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필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청년실업 등으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자금대출 미상환에 따른 개인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면서 경제활동의 제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 청년실업률 및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수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한국장학재단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환능력 저하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학생들의 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을 검토하였다. 일시적인 채무감면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신용회복의 핵심 연결고리인 취업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도입되게 된 제도가 바로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Income Contingent Credit Recovery Service)이다. 이 제도는 신용유의자에 대하여 취업 및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직자의 신용정보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인력풀을 구축하여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부실채무자(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학자금대출

건전성을 도모하였으며, 기업은 인재 채용과 더불어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요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기관 또는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해제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협약기관은 일자리 및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로 단계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사업 초기(2012년)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슈화 및 제도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대표사례를 선정하였고, 사업 확대를 위한 중기단계(2013년~2015년)를 3개년에 걸쳐 금융 및 민간 기업 등 사회 각 부분으로 대상 및 협약기관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연도별 목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학생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

한국장학재단은 금융기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 분야 25개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부실채무자의 취업기회 제공 및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319명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자생적 신용회복을 도와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협약기관 확대 및 신용회복지원으로 신용유자의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12월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과 협업하여 2년간 65명의 인턴을 채용시켰으며, 이 중 2명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 은행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이런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외 9개 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신정신용정보 등 시중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사회 전 분야로 25개 기관으로 협약을 확대하였으며, 319명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였다.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우수사례 및 협약식

김태원 의원,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 은행원되다
 일반학자금 대출연체 신용불량대학생 1만4360명
 기사입력 : 2012년 10월 11일 14시 49분

민선4기서울시장출마를 겨냥



장부의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신용유지대상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올해 8월 현재 14,360명에 달해 대학학자금 사각지대다.

경제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자금 대출이 일한 신용유지자 수는 지난 2010년 10,548명, 지난해 10,002명에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4,360명으로 4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학자금 대출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지자로 등록되고, 신용유지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 (OCR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이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지난 4월 장학재단은 우리금융지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자금대출로 인해 힘들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구직자 1,200명을 금융기관 인원으로 채용했으며 이를 중 50명(4.2%)이 신용유지자에서 신용회복 및 상담지원 대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OCRS 제도를 최우선 도입한 경남은행이 영구 신용불량대학생 2명을 정식 은행원으로 채용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학원의 신용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금융권에서 신용유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취업연계 '은행원'과 '신용유지자 취업 및 신용회복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가용소득에 기반한 일차적 신용을 통한 정상생활 basis 역할을 제도의 학자금대출 연체 상 채고를 위해 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홍보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제도의 내실화 제고

한국장학재단은 보다 많은 부실채무자에게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에 제도소개 및 채용진행 중인 협약기관과 링크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매년 부실채무자 보유 상위 대학을 방문하여 신용회복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온·오프라인 홍보내용

◆ 현재 채용중인 협약기관

- OCRS 협약기관에 취업지원이 어려울 경우에서 지원가능하고 채용 확정된 자에 한하여 손해금감면분할환원양정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유니비스 바로가기 (<http://www.jobunies.com/>)
- 호성IT(주) 바로가기 (<https://www.dodreami.com/main.hsitx/>)



또한,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재단 대·내외적으로 협업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단 내 사업과 연계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013년 대상자를 신용유의자에서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연체보유자 및 과다대출자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장학재단 내 운영 중인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추진하였다.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개선 내용

구분	추진내용	세부내용
대내	대상자의 범위 확대	(기존) 신용유의자 (변경) 부실채무자(신용유의자 포함), 연체보유자(연체3개월 이상) 과다대출자(학자금대출 1,000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 내 협업 추진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 장학사업과 연계
대외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 연계 제도 확대	해당지역의 신용유의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향후 계획)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부실채무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자금 상환이 가능한 환경 조성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및 민간 설립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각 기관에서 조성된 예산 및 기부금 등을 통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는 등 해당지역의 신용유의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였다.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부실채무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자금 상환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한국장학재단은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 중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는 부실채무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출 상환 구조를 확립하여 대출전선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부실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한국장학재단은 부실채무자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학자금 상환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의 질을 향상시켜 인턴 및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향후 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요약

□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도입

- (문제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위해 공장 등 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정상화 기반이 상실되는 모순이 발생
- (협업방안)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관간 기능과 노하우 결합
 - 캠프는 자산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산을 매입·임대 및 기업의 재매입시 우선매수권 부여
 - 협업기관은 운영자금, 채무조정, 경영자문 등을 매칭지원
- (협업효과)
 - 기업은 자산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및 신규 운영자금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가능
 - 금융회사는 부실우려 여신 조기회수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 사전에 기업부실예방으로 고용유지 및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기여

창조경제 핵심 주역인 중소기업을 살려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경기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작업은 기업의 자구노력 및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담보여력 부족으로 신규대출이 어려워 공장 등 핵심자산의 매각을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을 통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적기 매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매각 후 사용·재매입이 곤란하여 정상화 기반이 상실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진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기업의 경우, 신속한 자금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통한 정상화 지원 요구는 계속 되고 있으나 금융회사, 정책금융회사 등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매입 방식의 실효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없어 경영정상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캠프코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캠프코법상 부여된 자산인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코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해당 자산 재임대 및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지원기업이 영업기반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도별 외감 중소기업중 한계기업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계기업 수	2,355	2,420	2,440	2,446	2,623	2,728
한계기업 비중(%)	13.5	13.6	13.5	13.3	14.2	15.3

* 한국은행 금융안정화 보고서('15.6월)

중소기업 위기탈출을 위해 캠프코, 정책금융기관, 법원이 힘을 합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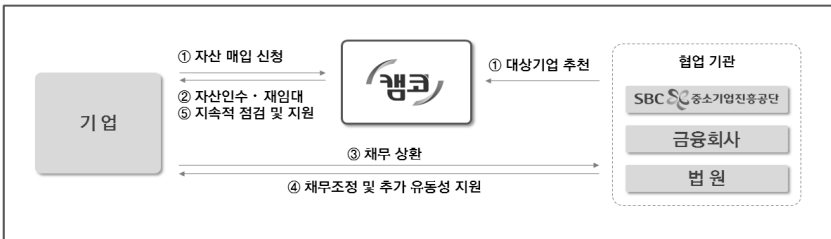
캠프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인수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자산인수 기본계획 수립하고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자산인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캠프 자체 예산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캠프에서 이러한 구조개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POOL 확보가 중요했고, 지원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여신관계 등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가진 정책금융회사 등과 기능 및 노하우를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논의하게 되었고, 2014년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회사를 시작으로 2015년 부산·경남·우리·하나·신한·대구·광주은행 등 시중은행과 MOU 체결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MOU 체결로 회생인가 기업 중 영업용자산 매각과 신규자금 지원 문제로 인하여 경영정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체계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협약

캠코 - 중소기업진흥공단



캠코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금줄 숨통트인 중소기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다

캠코는 2015년 협업기관으로부터 총 46개의 사업장을 추천받아 5개사의 자산(541억원 규모)을 인수하였고, 협업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자금 지원 및 금융회사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채무조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해 총 251억원을 지원하였다. 캠코는 2016년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 감소 및 신용도를 제고하였고, 신규 운영자금으로 영업력 강화를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채권금융회사는 기존 여신을 조기에 회수하여 여신건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생계지원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원기업 금융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

업체명 (계약일)	캠코지원	고용유지효과 (직원수)	재무구조개선 (차입금감소)	협업기관 지원내역	
				지원액	내역
T사 (15.5.18)	41억원	11	79억원 →40억원	10억원	운영자금, 미수 이자 상환유예
K사 (15.6.24)	302억원	114	574억원→320억원	218억원	만기연장, 분할상환
Q사 (15.12.24)	84억원	74	132억원→58억원	23억원	운영자금, 만기연장
D사 (15.12.24)	33억원	13	27억원→0억원	-	자금지원 검토 중
TB사 (15.12.30)	81억원	55	109억원→41억원	-	
합 계	541억원	267		251억원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협업을 통한 추가지원까지

자산매각이 사전적·사후적 구조개선의 핵심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영업자산을 매각할 경우 영업기반이 없어지는 구조적 모순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장 역할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기업, 채권금융회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캠프코는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위해 협업주체 각각의 기능 및 노하우를 결합한 최적의 지원방안을 구축하였다. 캠프코는 기업구조조정 노하우 기능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회사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 추천과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으로 기업의 유동성위기 극복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 3.0정책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민관협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위기탈출에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캠프코의 지원은 멈추지 않는다!

제도 운영 초기 협업금융기관들로부터 대상기업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임대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임대사업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집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한 결과 캠프코에 매각한 자산을 경영정상화 이후 기업이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 납부 부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최초 자산매각 이후 재매입시 4.6%에 달하는 취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면제 등 세제 감면을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캄코는 정책자금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정책금융공사 등과 신규 협업을 추진하여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협업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요약

□ 해외환자 의료분쟁조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통한 해외환자 의료분쟁의 효율적·효과적 대응

- (문제점) 해외환자 급증에 따라 외국인 대상 의료분쟁 및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통역 지원 및 조정·중재 제도 관련 정보 제공 미흡으로 해외환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저하
- (협업방안) 보건산업진흥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협업 체계 구축
 - (보건산업진흥원) 1차 상담 지원 및 의료통역 인력 매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 법률 지원 및 상담인력 교육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통역사 인력 DB 관리 및 인력 지원
- (협업효과) 해외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효과성 및 해외환자 만족도 제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2009년부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연평균 약 36.9%씩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의 증가율은 약 53.5%로 타 진료 분야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 브로커 및 의료 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 분쟁이다. 불법 브로커란 「의료법」 제27조의 2(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원만하지 못한 분쟁 해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분쟁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통역 지원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의 한국 의료 이용의 편의성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언어소통 제약으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률도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환자가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서류 작성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통·번역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권익보호와 분쟁조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15.2.13).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국제환자지원센터(현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16)하여 정보 제공 및 법률 상담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해외환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에게 의료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기관에 산재한 의료분쟁 상담 기능을 효율화하고 언어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의료 신뢰도 저하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해외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 간 해외환자 의료분쟁 조정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총괄하고 메디컬 콜(1577-7129) 및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한 1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의료통역사 인력을 매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의료통역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 DB를 관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할 경우, 인력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외국인 환자의 조정 및 중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입력의 법률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2016년도부터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공동 입주한 서울시 의료관광 헬프 데스크와 협력하여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 통역 및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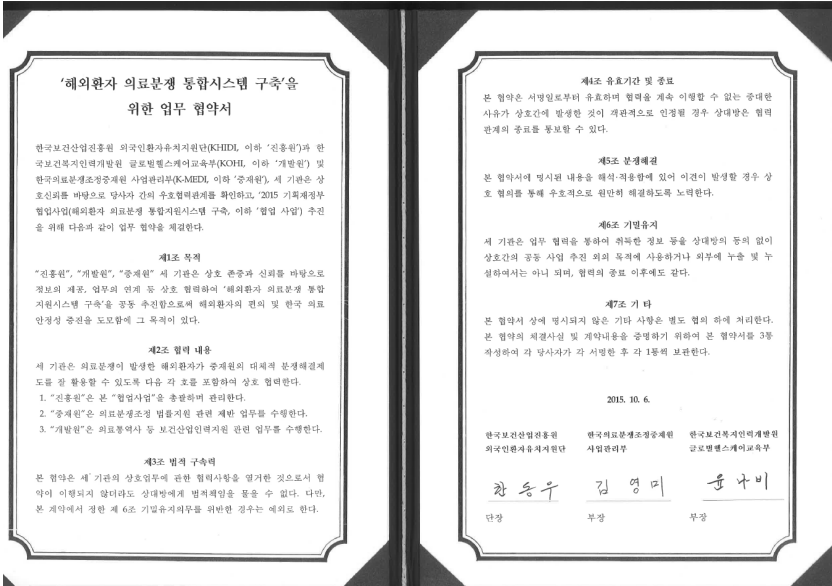
▼ 협업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명	주요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협의체 총괄 및 관리 -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매칭 - 메디컬 콜을 통한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1차 상담 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담 인력 법률교육,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 법률 지원 -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자체(서울시)	- 의료통역사 인력 DB 관리 및 인력지원 등 -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및 상담 지원('1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노력!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간 협의체구성 및 세부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15.3~'15.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간 해외환자 의료분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5.10.6).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료통역사 과정 수료생 DB 접근 위한 시스템 개선(의료통역 스마트 매칭)에 관한 협의('15.10~11.)를 진행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지원 관련 세부 협력 방안 협의('15.11~12.)를 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상담 직원들의 상담 역량 확대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분쟁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상담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15.11.12, 23, 12.3.). 특히, 서울시와는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현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입주 및 의료통역 등 협업 관련 논의('15.11~12.)를 진행하였다.

▶ 협업기관 간 업무협약서



201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분쟁을 비롯한 외국인 환자 통합지원을 위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개소하였고(16.2.29) 서울시 의료관광 헬프데스크에 입주하여 의료통역 등 해외환자 의료분쟁 지원 업무 수행하고 있다.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외환자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지자체 등으로 의료분쟁 상담 창구가 분산되었고 일회성 단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조정 및 중재로 연결되는 사례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의료분쟁 상담 및 지원창구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로 일원화되어 기관들의 중복업무 참여 인력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 및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존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의료통역사를 연계하여 통·번역 및 조정·중재 절차를 밀착 지원하여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협업 전	협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창구 분산 - 서비스 연속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자체로 분산된 개별 상담 수행 • 1회성 상담이 주를 이루며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까지 연결되는 사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창구 일원화 - 상담 후 조정까지 연속 서비스 - 다국어 상담·지원(5개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진흥원·지자체)로 의료분쟁 상담·지원 창구 일원화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시, 개발원 전문 인력 DB를 공유하여 통·번역 및 조정·중재절차 밀착 지원 •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지원

즉, 기존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외국인 환자는 정보 파악 및 통역 등 분쟁조정 절차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의료분쟁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조정 및 분쟁의 참여율 제고 및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19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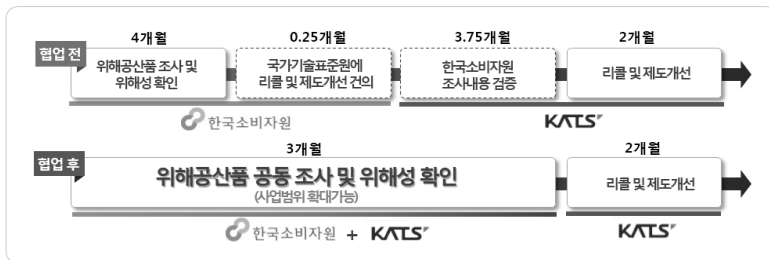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요약

□ 위해공산품 감시·퇴출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해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국민 소비생활안전 확보

- (문제점) 소비자 안전업무 수행기관 간 업무 분리 및 권한 제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 품목의 관리가 어렵거나 시중의 위해공산품 퇴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협업방안) 양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사각지대 위해공산품 공동조사 후 즉각적인 행정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 (협업효과) 국민생활안전 확보(총 110억원 위해제품 리콜), 공동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총 3억 2천만원), 업무프로세스 단축(10개월→5개월)으로 업무효율 증대

▽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 협업 흐름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공산품 없는 안전한 시장을 위해 고민하다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고 있는 A팀장은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다. A팀장이 관리하는 팀은 소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해공산품을 찾아내고, 이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팀에는 위해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해정보 수집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전문 조사인력도 많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A팀장의 고민은 다른 데에 있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위험한 공산품들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A팀장의 팀에는 결함이 발견된 위해공산품이더라도 이를 강제로 리콜(제품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 게다가, 간혹 제품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미흡한 경우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관련기관에 위해공산품의 리콜이나 안전기준의 개선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A팀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팀에서 발견해낸 위해공산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과의 B과장 역시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의 인기가 높아 해외의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에 빠르게 유입될 뿐더러, 신기술이 적용된 트렌드제품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제품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급속도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컸다. 게다가, 기존의 안전기준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신종 제품들을 철저히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의해 위해공산품을 조사하고 결함제품을 리콜하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인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공산품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

‘국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의 위해공산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빠르게 제거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양 기관의 고민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을 위한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 연계사업’ 협업 체계가 출발하게 되었다.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 연계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힘을 합쳐 추진한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 연계사업’은 각 기관이 각자 수행하던 소비자 안전업무를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시킨 공공기관 협업사업이다. 공산품에 대해 각기 따로 안전조사를 수행했던 두 기관이, 이제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결함제품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공산품의 시장 퇴출이 더욱 빨라지고 결함제품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지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다.

기관별 강점을 부각시킨 협업으로 위해공산품을 신속히 제거

기존에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위해공산품 관련 안전업무는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 품목의 관리가 어려웠으며, 시중의 위해공산품을 제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두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약점을 상호보완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양 기관이 별도로 실시하던 위해공산품 조사를 공동 실시하기로 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재분담했다. 소비자 위해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위해 공산품을 모니터링하고 공동조사 품목을 발굴하기로 했으며, 위해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안전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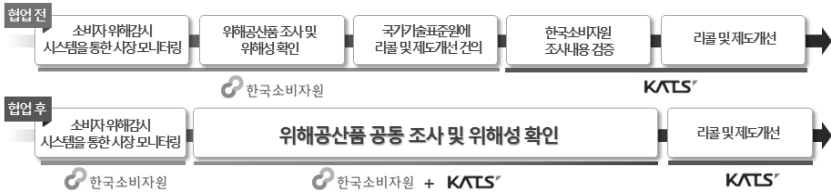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산품 관리감독 및 관련 제도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상 공산품의 시료를 구입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제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관련 안전기준이 미흡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간 역할 분담



또한, 프로세스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협업 전에는 양 기관에 걸쳐 ① 위해공산품 모니터링, ② 위해공산품 조사·위해성 확인, ③ 유관기관에 리콜·제도 개선 건의, ④ (유관기관에서) 조사내용 재검증, ⑤ 리콜·제도개선 실시 등 총 5단계로 이루어지던 양 기관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3단계로 개선했다. 따라서 협업 후에는 ① 위해공산품 모니터링(한국소비자원), ② 위해공산품 공동조사 및 위해성 확인(양 기관 공동), ③ 리콜·제도개선(국가기술표준원)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해공산품 퇴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협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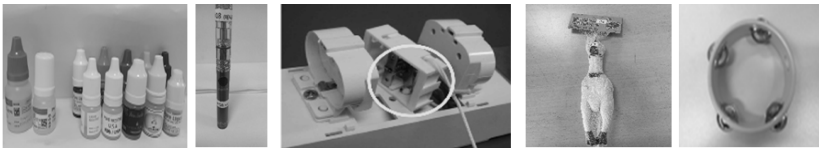


총 110억원의 결함제품 퇴출, 국민 생활안전 체감도도 경총

- 소비자 위해사례 다발하는 전자담배, 형광등, 어린이 완구·교구 등 63개 제품 리콜

〈정부 3.0〉정책에 따라 양 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총 110억원에 달하는 위해사례 다발 공산품을 리콜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수요가 증가하던 전자담배, 민간의 80%가 사용하는 형광등,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인 어린이 완구·교구는 소비자 안전사고가 다발하던 품목이어서 더욱 국민안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 ▼ 소비자 위해요소가 있는 전자담배(액상) 및 형광등기구, 어린이 완구



또한, 문제가 확인된 제품들의 단순 리콜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과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위해공산품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위해공산품의 바코드를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될 경우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시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의 실생활과 깊게 관련된 위해공산품에 대한 조사 결과와 리콜제품 정보는 주요 TV와 일간지 등에 수십 회 이상 보도되는 등 국민의 호응도 컸다.

- ▼ 공동 안전조사 결과 언론홍보 사례



▽ 위해공산품 리콜 추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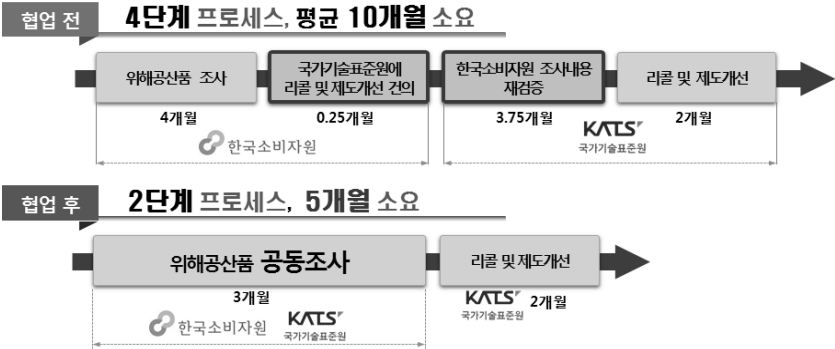


협업을 통한 프로세스 단축으로 소비자 피해 조기 차단, 기관 칸막이를 제거한 공동사업으로 예산 절감 효과까지

협업 과정에서는 시장에서 결함제품을 퇴출시키는 것 외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양 기관이 4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공산품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총 3억 2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중복으로 소요되던 시료 구입비와 시험 수수료가 협업을 통해 대폭 절감된 결과였다.

또한, 공동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자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제거되어 위해공산품의 시장 퇴출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기존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해공산품을 조사한 후 이를 유관기관(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하여 제품 리콜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데에 4개월, 이후 관련기관에서 이를 다시 재검증하여 제품을 리콜하기 까지 6개월이 걸려 위해공산품 퇴출까지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협업의 결과 총 소요기간이 5개월로 단축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양 기관은 조사기간이 단축된 점을 활용하여 사전 계획했던 품목 외에 ‘선글라스 품질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협업에 따른 위해공산품 조사기간 단축 효과



국민안전 위해요소 신속 제거, 공산품을 넘어 모든 분야로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공연장이나 선박 안전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이 팽배해 있는 만큼, 공산품 외에도 보다 넓은 분야의 위해요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 식품·의약품 등 한층 더 넓은 분야의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는 각 분야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향후에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각 기관에 산재된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안전정보 제공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7년에 선보일 이 시스템에는 민간 기업도 참여하여 자진리콜사실 등의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이렇듯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민간의 협업의 지속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 중소농 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 정보가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

요약

- 산재되어 있는 주요 농수산물식품 수출정보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통합, 한번에 간편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편의 도모
 - (문제점) 농식품 수출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민간 수출업체 해외 진출 정보수집에 어려움 발생
 - (협업방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협업 수출정보 연계 및 원스톱 서비스 추진
 - (협업효과)
 - (신시장 개척) 중소 수출업체 해외 신시장 신규 개척 발판 마련
 - (편의성 제고) 3개 기관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및 다이렉트 메일링 (Direct Mailing) 서비스 실시로 이용자 확대(1,068개소) 및 고객 만족 기여
 - * 주요 정보 시각화로 정보 인식도 향상 및 격주 발간을 통한 적시성 확보
 - (예산 절감) 추가 예산 투입 없는 수요자 편익창출 서비스 개발
 - * 기존 사업(aT 발행 수출기상도) 활용한 타기관 정보와의 통합 실현

산재된 수출정보, 높아지는 정보장벽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농가·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수출을 진행해오고 있는 업체에는 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별·품목별 수출동향, 수시로 변화하는 국가별 식품 제도나 비관세장벽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용 품종 개발 등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이 곧 수출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기에 번거로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수출동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T)를 방문하여야 하고, 검역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 품목의 R&D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청을 활용하여야 한다. 비록 각 공공기관들이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산재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정보접근 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aT에서는 2013년도 여름부터 국가별·품목별 수출동향을 시각화한 기상도 형식의 '농수산식품 수출기상도'를 발간해왔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상도'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종종 동향 이외 다른 정보 또한 제공받고 싶다는 피드백을 보내왔다. 한편 2015년 초 개최된 농수산식품 민관합동수출개척협의회 의에서 수출 동향 외 품목 개발, 검역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수출업체를 비롯한 정보수요자들이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은 수요자 니즈(needs)를 충족시킬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수출동향과 더불어 수출관련 핵심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수출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알뜰하게, 정보는 풍성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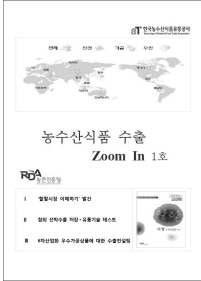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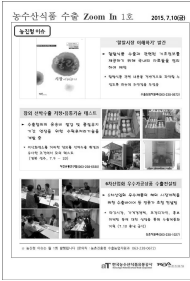
aT에서 기존 발행하던 ‘농수산 식품 수출기상도’ ▷ 2013년 7월 5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격주로 발행 국가별, 품목별 농식품 수출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지자체 및 수출업체들에게 메일링 서비스.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수출업체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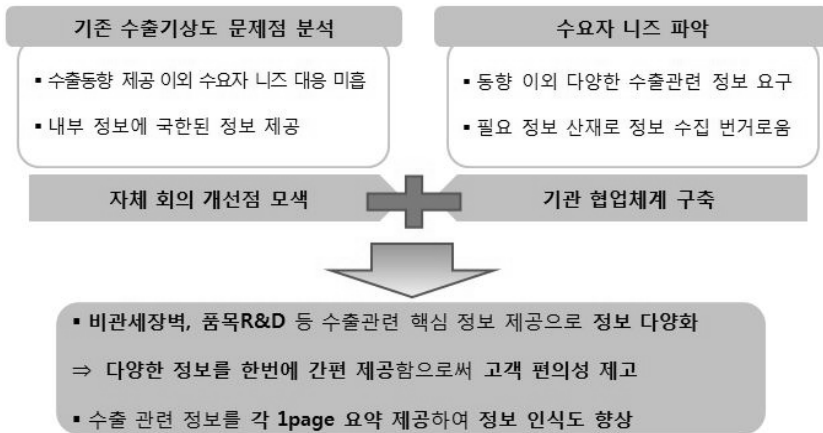
aT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수출 관련 여러 정보 중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농촌진흥청의 품목 R&D 정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관세장벽 이슈였다. 두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제공 방식과 주기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통합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 비정기적으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에 정보를 게시하고 있었고,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통합 수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기관 담당자와의 내부회의와 의견 수렴 끝에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발간되던 수출기상도에 각 기관에서 선별한 핵심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탄생

우선, 동향만 제공하던 기존 수출기상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기본 포맷을 유지하면서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보인지도를 향상시켰고, 의견수렴과 투표를 통해 기존 수출기상도에서 동향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수출정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으로 제목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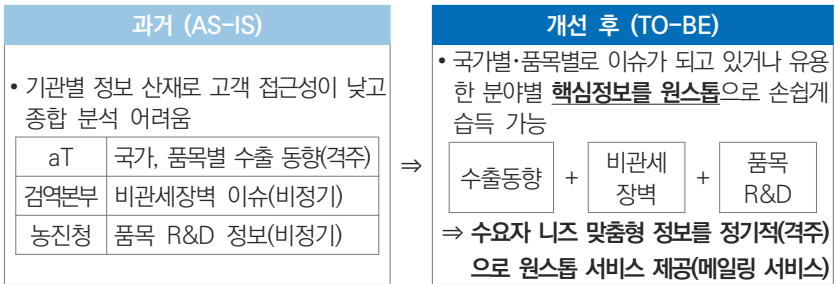
		
<p>▲ aT,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기관이 만나 머리를 맞대었다.</p>	<p>▲ 협업의 결과 2015년 7월 10일 발간된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호’</p>	

다음으로,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기관은 부서별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 중 수출 관련 핵심정보를 선별(발간자료, 검역협상완료, 농약안전성검사정보 등) 및 정리하고, aT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수출동향 정보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수출 Zoom In을 발간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신규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메일링 서비스 이용자 외에 새로운 수요자를 발굴하였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시작하였다. 끝으로 3개 기관 공동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수출정보 제공 시스템 Zoom In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업체들의 활용도 제고를 꾀하였다.



협업으로 수출정보 이용문턱을 낮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다

aT에서 2013년 7월 처음 발간한 농수산물 수출기상도가 2015년 7월 ‘농수산물 수출 Zoom In’으로 탈바꿈되면서 동향 이외의 다양한 수출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기능이 강화되자, 정보이용고객이 기존 600여개 업체에서 수출업체·유관기관 등 약 1,000여개로 확대되었다. 이는 3개 기관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다. 최근 실시한 정보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만족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번에 습득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농식품 수출에 종사하는 한 공무원은 농가 교육 및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계획 수립에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을 참고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한 수출업체에서는 종합적인 시장 현황 파악 및 바이어 상담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회신을 주었다.



【활용사례】

동남아로 딸기를 수출하던 C수출업체는 기존 수출시장 포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던 차에, 메일로 받은 농수산물 수출 Zoom In 2호에 게재된 딸기 캐나다 검역 협상타결 정보를 입수하였다. 캐나다 수출동향, 딸기 경쟁력 등 가능성 검토 후 12월 캐나다 딸기 최초 수출(약 20천불)로 해외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에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aT는 앞으로 기존 메일과 홈페이지로 제공하던 정보 채널을 웹진 등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국민체육진흥공단

21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요약

□ 내 건강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건강관리를 손쉽게

- (추진배경) 운동 및 체력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보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체력관리에 소홀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확대
- (협업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안내문 및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 내 국민체력100 안내 정보 수록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후 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국민체력100 서비스 제공
- (협업효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탐색 불편 해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편익 제고, 지속적 운동참여 유인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100세까지 건강하게,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국민체력100 서비스 개시

급속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및 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66.7%는 정보 부족, 건강 이상,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이유로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국민체력100’이라는 새로운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국민체력100이란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의 체력수준을 진단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해 주는 스포츠복지서비스다. 비만이나 저체력인 경우 주 3일 8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체력증진교실에 참가하여 체력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전국 26개의 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체력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체력 향상 정도를 진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0.3%에 불과

서비스 도입 4년차인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서비스의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기를 공모한 적이 있다. 체험수기 공모는 고통스럽던 무릎관절 통증을 겪던 중 체력인증센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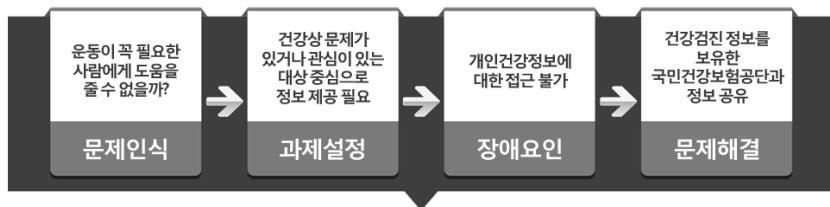
운동처방대로 근력운동과 자전거타기를 병행한 이후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60대 남성의 사연, 갑상선항진증과 우울증을 겪던 30대 여성이 국민체력100의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복용하던 약을 끊고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된 사연 등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국민체력100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앞서 언급한 30대 여성은 수기를 통해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민체력100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린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만인구도 줄이고, 나처럼 건강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국민체력100을 이용한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민체력100은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운동을 망설였던 국민들이나, 건강상 이유로 운동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없이 효과적인 서비스이지만, 2014년까지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은 16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0.3%에 불과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센터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엇보다 국민체력100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효과적으로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먼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건강 문제로 운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였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체력100 서비스의 확산 필요성과 대국민 건강증진사업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국민체력100 정보 제공 |



양 기관의 첫 번째 협력 과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건강검진안내문과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된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에 국민체력100 정보를 수록하여 안내하는 것이었다. 건강검진안내문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대사증후군관리지침서는 질병 위험이 높은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건강 문고이다. 이 두 정보 채널로 198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국민체력100 서비스가 안내되면서 체력인증센터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등 홍보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양 기관의 협업이 국민체력100을 위한 정보 제공 채널 공유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질병 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국민들,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 상담과 질환·영양 교육, 의료기기 대여 등 의료 관련 서비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국민체력100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면 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시 체력인증센터의 현장 인력이 체력측정 장비를 들고 직접 사업장이나 모임 장소로 찾아가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체력인증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1,203명이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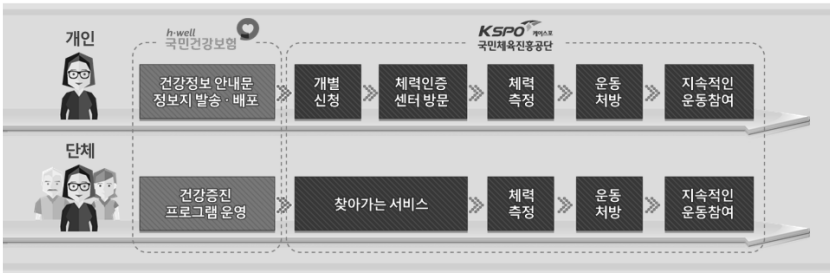
**국민체력100 정보 수록한
건강검진안내문
168만부**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전국 센터현황 등

**국민체력100 정보 수록한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 30만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시
찾아가는 국민체력100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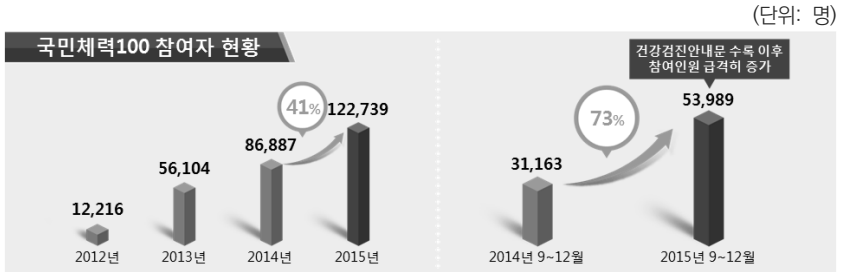
대사증후군 사업장 사후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협업 이후 국민체력100을 이용한 국민이 급격히 늘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체력100 서비스 정보가 수록된 시기는 2015년 9월이었다. 그런데 9월 이후부터 체력인증센터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안내문에서 국민체력100에 대한 정보를 보았는데 이 서비스가 무엇

인지 궁금하고 집 근처 가까운 체력인증센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체력100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2015년 참여인원이 전년 대비 41%나 늘어났다. 무엇보다 건강검진안내문이 수록된 9월 이후의 참여인원은 전년보다 73%나 늘어난 것을 볼 때, 건강검진안내문의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접하고 운동 관리를 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국민체력100을 통해 전문강사가 가르쳐 준대로 운동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식단 조절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많은 효과를 얻어가고 있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B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VOC에 다음과 같은 칭찬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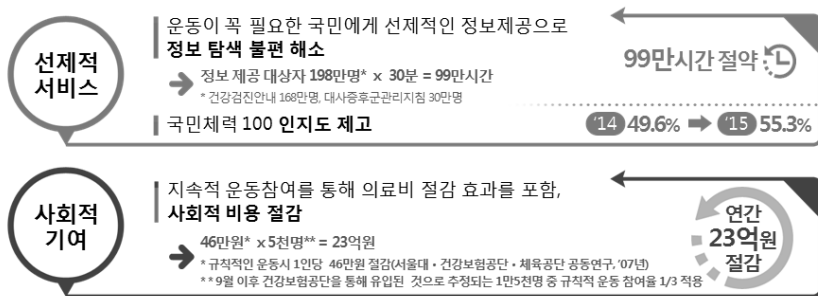
▶ 짧은내용

제목	부산 북국민체육센터 라효상 선생님 등 운동처방사, 측정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산북부지사에서 만성질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에게 자조모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교육 대상자들에게 체력측정과 건강상담, 운동 실습 등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당자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라효상 선생님과 운동 실습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신 운동처방사 남자 선생님과 측정사 너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측정사 선생님을 총 다섯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대상자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마음이 느껴져 감동을 받고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다섯명이라고 하시는데 모두 다 친절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시는 모습이 아릅답아 보였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찾아 가고 싶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과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

이번 협업을 통해 운동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탐색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탐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국민체력100에 대한 인지도가 55.3%로 전년 대비 5.7%p 향상된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의료비 절감 효과를 포함해 1인당 연간 46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국민체력100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한 국민은 대략 1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1/3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한다면 연간 23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력100과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대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협력 모델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건강 관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체력과 의료 통합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찾아가는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의 체력인증센터는 26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력인증센터가 없는 지역의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국민체력

100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 수준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체력측정 장비가 장착된 전용 차량으로 이동형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16년 3월부터 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체력100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스포츠복지 후원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국민연금공단

22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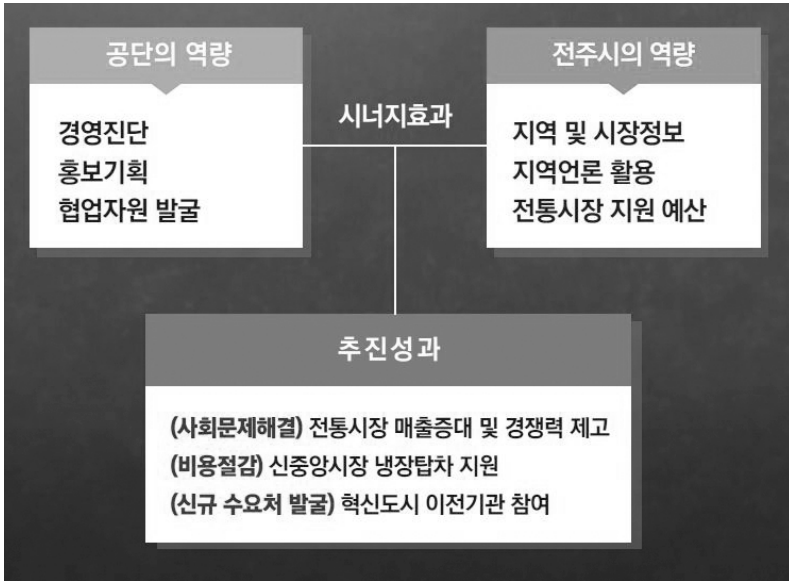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걱정마요 김대리!! 전주를 품대!! -

요약

□ 전북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문제점) 공단 전북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 공존
 - NH공사 이전 불발, 자금운용본부 이전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민의 우려 존재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동화 필요성이 크게 요구됨
- (협업방안) 공단의 성공 경험(서울 망원시장 활성화)과 전주시의 행정력 연계
 - (공단)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진단, 홍보, CS 마인드 함양 등 마케팅 지원
 - (전주시) 전통시장 육성팀의 업과 연계한 행정력 지원, 정보제공 등
- (협업효과) 공단의 안정적인 지방이전,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전주시, 국토정보공사 등)
 - 전주 신중양시장 콜센터 월평균 매출 10.4배 증가



걱정마요 김대리란?

- 기존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서비스
-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리는 생일파티, 다과회 등 사내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트에 직접 가서 일일이 준비해야 했으나,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의 때 알게 된 '걱정마요 김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 한 통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 공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외의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에 맞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전북혁신도시 내 11개 이전 대상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황이고, 이전기관들은 지리적 이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이전 노력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500조원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법적, 정치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공단의業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노후준비지원, 가입자관리사업 등 행정업무가 대부분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공단의 사회적 책임 실천 사업들을 검토하던 중, ‘걱정마요 김대리’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눈에 띄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통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망원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언론의 주목도 받은 사업으로, 공단이 이전하는 전북지역에서 추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다.

문제는 공단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가능한 협업자원을 파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인데,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북도청, 전주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주시와의 협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다

전북도청, 전주시청과 전화로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전주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육성팀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5년 4월 공단은 망원시장에서의 성공경험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전주시청 지역경제과에 찾아갔다. 망원시장의 사례를 몇 차례 논의한 뒤, 각 기관 간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

공단은 망원시장 활성화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영진단, 홍보, CS 마인드 등의 마케팅 지원을, 전주시는 전통시장 육성팀의 업과 연계한 행정력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 전주시 담당자들은 처음 공단의 협업 제의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보통 이전기관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해 달라, 도와주라는 요구를 하는데, “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무언가 지역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데, 전주시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서를 들고 왔으니 말이다.

공단은 전주로 이전하기 전 서울과 전주를 몇 차례 오가며 전주시와 회의를 통해 ‘걱정마요 김대리’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시장으로 전주 신중양시장을 선정하였다. 신중양시장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존재하는 시장이고, 더군다나 상인회의 의식이 열려있어 전주시와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다.

순조로워 보인 출발... 하지만 서울 망원시장과는 다르다

공단 이전 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인 7월 공단-전주시-신중양시장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공단은 연간 2억원 상당의 사회공헌물품을 신중양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전주시와 협업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통시장 살리기 한 몫’이라는 기사를 내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8월부터는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일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걱정마요 김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신중양시장 상인회의 의욕이 대단하여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얼마 못가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첫째는 맞춤형 상품의 수준미달이었다. 공단에서 각종 행사와 관련 시범적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서울 망원시장에 비해 세트의 구성에서 세련미가 떨어졌으며 서비스에서도 이렇다 할 차별점을 찾지 못하였다. 둘째는 협업의 주체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에 비해 프로보노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온전히 공단의 힘으로만 구매, 마케팅과 홍보 등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시기적으로 전주 인근지역 대학교의 2학기 축제가 학술제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장물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어 참여에 어려움을 표한 점 등 망원시장에서 추진했던 때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업자원들과 호흡하다

자칫하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공단 직원과 전주시청 공무원은 신중양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 맞춤형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게 하고자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을 드나들었다.

복날에 쓰일 수박을 냉장시키기 위해 시장 내에 있는 정육점을 뛰어들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주문물품이 나가기 전 상인회장과 하나 하나 검수를 하기도 하였다.



공단의 고객지원실, 홍보실의 협조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인을 대상으로 CS강의를 실시하였다. 전북대 총학생회를 통해 김째뽕이라는 전북지역 파워블로거를 소개받아 홍보 포스터 및 전단의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전주시의 협조를 통해 2개 구청 33개 동사무소에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비치하였다.

새로운 협업기관으로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끌어들여 '걱정마요 김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하였다.

차츰 성과가 보인다

추석 대목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사업 초기 카드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 면박을 주었던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방울토마토는 물론 사과도 깨끗이 씻어 포장을 하는 솜씨를 선보였다.

상인회에서는 주문상품을 하나 하나 검수하면서, 닭장정을 주문하면 일회용 접시와 위생용 장갑, 이쑤시개까지 달려 보내는 꼼꼼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주시도 신선한 배송을 위해 냉장탑차를 지원하였으며, 산하기관에도 동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게끔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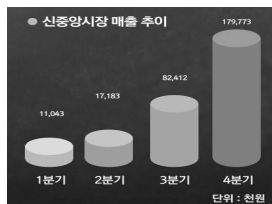
중전 공산품 위주의 공단 사회공헌물품에 전북지역의 특산물이 추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충실하게끔 전반적인 품질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중양시장의 매출 증가,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

눈에 보이는 성과로는 공단 이전 후 신중양시장 콜센터의 월평균 매출이 10.4배 이상 증가하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전북도청과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공단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전북도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 콜센터 월평균 매출 10.4배 증가
(목표대비 335% 달성)

2015년	1월-5월 (합업 전)	6월-12월 (합업 후)
월평균매출	379만원	3,935만원
합계	1,895만원 (5개월)	2억7,145만원 (7개월)
증가	10.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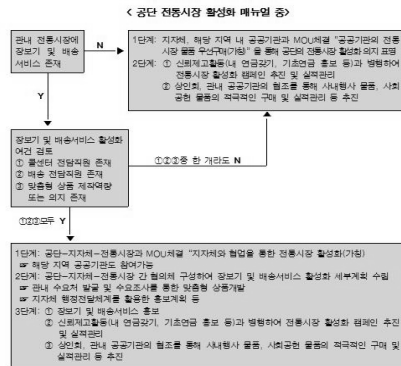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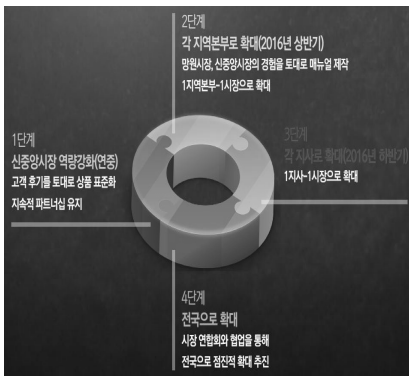
공단은 전주시의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협업의 주체를 찾는 과정에서 탐색비용,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신중양시장 상인회와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을 구매기관으로 끌어들이고,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유대감이 증진되는 성과도 이루게 되었다.

향후 방향

공단은 서울 망원시장과 전주 신중양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에는 7개 지역본부, 2017년에는 전국 107개 지사를 활용, 해당 지역의 지자체·공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과제를 협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 전문병원 연계 이송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 -

요약

□ 기관 간 협업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문제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골든타임 내 신속·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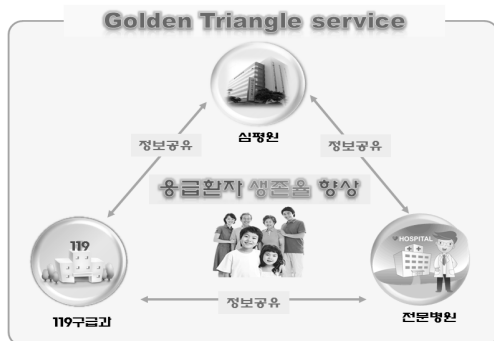
※ 뇌혈관질환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76.5명

(’14. OECD Health Data, OECD 평균은 68.1명)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35.2% (’10년 기준(보건복지부), 선진국은 20% 수준)

- (협업방안) 국민안전처(119구급과)와의 전문병원 정보 및 응급이송 내역 등 정보연계와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이송 및 전문치료 제공
- (협업효과) 중증 및 외상질환의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으로 국민안전 제고

▼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추진 배경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6.5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8.1명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사망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심한 외상이나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나 수술을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ICT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약품 안심 서비스, 혈액사고 예방정보 제공,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에서 환자안전에 위해 활용하고 있다.

먼저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10년 12월)는 전국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의 실시간 안전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메르스(MERS) 의심자 등 감염병 관련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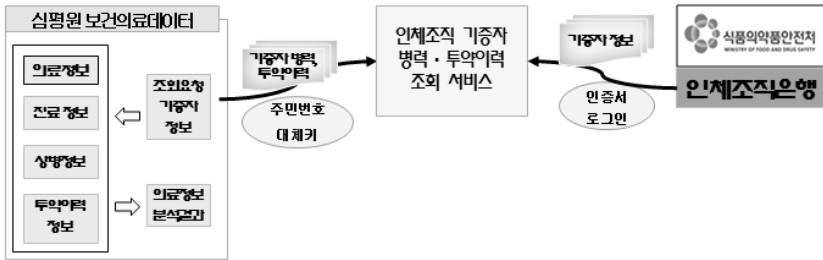
▼ 의약품 점검화면 및 업무흐름도



그리고 혈액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헌혈 부적합 약제 투약환자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송신하는 것이다.

2015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인체조직의 기증·이식·분배 등 적합성 판정을 위한 정보를 조직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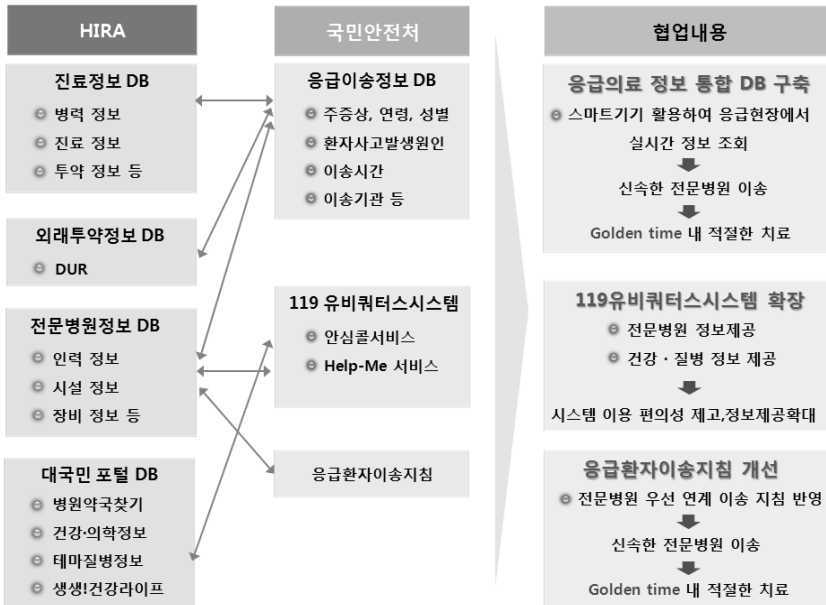
▼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흐름도



추진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안전처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통하여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이송 및 맞춤형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 협업 기대효과

협업전(Before)	협업후(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병원 명단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으나, 기관 간 정보공유 미비로 실질적 활용 현황 파악 곤란 ▪응급환자의 정확한 병력, 투약이력 확인이 어려워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수술 적용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병원 정보와 119 call 현황, 응급환자 병원이송 정보 공유 ▪전문병원 연계 이송 활성화로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응급환자 진료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지정현황 및 진료정보 제공,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하였고, 국민안전처는 119 call 현황 등 응급환자 이송정보 제공,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시스템 검증을 담당하였다.

* 전문병원(「의료법」 제3조의 5):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예. 수지접합, 화상 등)

추진실적 및 협업성과

'15년 6월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협업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 협의가 시작되었고, 정보공유를 통한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유하고 있는 20개 분야 111개 전문병원 지정정보(소재지, 인력, 시설 등)를 국민안전처에 제공하였으며, 국민안전처는 화상, 수지접합, 심장, 뇌혈관 등 외상 및 중증질환 관련 4개 주요부분에 대한 응급이송 정보(주증상, 사고원인, 이송시간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4개 분야에 대한 응급이송 정보 세부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등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주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선순환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국민생명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 구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응급이송 정보 분석 결과

구분	총계	중증질환 분야		외상질환 분야		
		심장	뇌혈관	화상	수지절함	
총계	15,525 (100)	2,534 (100)	4,850 (100)	2,456 (100)	5,685 (100)	
성별	남성	8,639 (55.6)	1,367 (53.9)	2,553 (52.6)	1,311 (53.4)	3,408 (59.9)
	여성	6,886 (44.4)	1,167 (46.1)	2,297 (47.4)	1,145 (46.6)	2,277 (40.1)
연령별	0-10대	1,244 (8.0)	141	195	415	493
	20대	1,886 (12.1)	179	269	515	923
	30대	1,676 (10.8)	165	344	379	788
	40대	2,235 (14.4)	304	660	362	909
	50대	3,066 (19.8)	567	963	396	1,140
	60대	1,928 (12.4)	389	789	181	569
	70대	1,983 (12.8)	450	905	121	507
	80대	1,304 (8.4)	291	614	80	319
90대이상	203 (1.3)	48	111	7	37	
시간별	03:00-08:59	2,347 (15.1)	465	816	367	699
	09:00-14:59	4,711 (30.4)	712	1,494	706	1,799
	15:00-20:59	4,647 (29.9)	740	1,450	696	1,761
	21:00-02:59	3,820 (24.6)	617	1,090	687	1,426

응급상황 재발 시에,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동의서*를 확보하여 ‘119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안심콜서비스(내국인), Help-Me서비스(외국인)와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 심장, 뇌혈관 등 해당 분야 7개 전문병원 방문 및 이용동의서(118명) 확보

ICT 기반의 기관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한 전문병원으로 119 이송 및 처치를 받은 A씨는 현재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향후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민안전처(119구급과)에서 운영하는 ‘119유비쿼터스시스템’을 알게 되어 이용동의(등록)하였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병원 정보와 연계되어 향후 재발할 경우, 기존에 진료받았던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되고, 해당 병원에서는 본인의 병력과 투약이력에 기반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안전처의 협업 노력으로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중증질환이나 외상환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인 쇄 : 2016년 5월 2일

발 행 : 2016년 5월 9일

발행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록 :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ISBN : 978-89-8191-821-7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